

第282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5號

國會事務處

2009年4月9日(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附議된案件

-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1

(10시07분 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경제에 관한 질문(계속)

(10시08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국무위원 3인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질문하시는 정하균 의원에게는 국회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질문시간을 조금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배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 출신 민주당 소속 조배숙 의원입니다.
윤중로에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

든 국민들이 경제위기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벚꽃은 언제나 필까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국가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부패해도 좋으니 경제만 살려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 자체에 실망을 느끼다 못해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1년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전대미문의 세계경제 위기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핑계만을 대기에는 너무 웅색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아직도 이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 CEO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대통령께서는 CEO 출신의 대통령이십니까.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정을 총괄하시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저는 모시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러나 대선 때 경제를 잘 살려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약속했고 그래서 선출이 됐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MB 정부와 여당은 집권 초기부터 줄곧 과거 정권들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좌파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7일 날 월스트리트저널과 3월 29일 파이낸

설타임즈와의 특별기고문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의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은 전 세계와 공유할 소중한 교훈’이라고 평가 내렸습니다. 작년에 또 국내에서도 비슷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대내외에 국민의정부의 치적을 확실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아직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 용어는 이제 우리가 여야간에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만……

○조배숙 의원 쓰지 않기로 했어요?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에……

○조배숙 의원 쓸 때는 언제고?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조금만 답변을……

○조배숙 의원 예.

○국무총리 한승수 대외경제 여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는 당했지만 국내에서의 이와 같이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수출도 많이 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밖의 여건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께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질책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집권 초기에 사상 초유의 고유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가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온 이와 같은 상황이 연속됐기 때문에 본래 의도했던 대로 경제를 운영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질문을 한정해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죽 그런 평가를 해 왔는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배숙 의원 해 보세요.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만 1년 동안 대내외에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잃어버린 10년의 IMF 극복 성공기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저는 이 정부의 최대의 재정운용의 잘못은 가진 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봤듯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기업의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담 등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세수가 13조 원 감소되었고 또 경기악화로 인한 세수감소는 11.2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됐습니다. 당장 올해 추경의 세수 감소로 11.2조 원을 보충해야 합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하는 이유는 정부의 경기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추경을 해야 하는 배경은 어제도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런 세계적인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조배숙 의원 그건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조배숙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측이 빗나간 것은, 예측이 빗나간 것은 전 세계가 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 생각합니다.

○조배숙 의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이다, 잘못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경기 예측이 빗나갔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로서?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세입예산, 세출예산 다 지금 재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당연한 거 묻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말씀 계속하시지요.

○조배숙 의원 아니, 답변을 좀 하십시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경기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변경을 했으면 경기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에 세입예산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11조 2000에 해당하는 세입감을 그래서 경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배숙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2009년도 세입예산의 전제가 된 각종 감세법률도 다 원상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가 보편적으로 이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의 확대와 감세정책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배숙 의원** 지금 미국은 감세정책에서 돌아섰습니다. 부자들에게 대해서는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이렇습니다. 경기예측이 빗나가 가지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하는데 지금 세입예산안 부분을 보면 경기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감세를 했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세입예산이 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졌고 또 감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세의 배경을 보십시오. 감세의 배경은 경기가 좋을 줄 알았고, 감세했지요. 그리고 또 국가채무 비율입니다. 어저께 대정부질문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국가채무 비율의 그 기준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양호하다는 믿음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괜찮으니까 감세를 해도 좋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국가채무 비율의 기준산정에 문제가 있고, 국제적인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그렇게 양호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세는 철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떡세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우리의 국가채무 상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하지 않다는 것은 오해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어제 답변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IMF 기준으로 하고 있고, IMF 기준도 86년에 발표된 기준 또 2001년부터 권고하는 기준 그리고 OECD 기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도 2012년부터, 86년 편성된 지침에서 2001년 것으로 가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서 2012년부터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하나, 뭐 어느 것으로 하나 우리나라 재정기준은, 건전성은 대단히 양호합니다. 그렇습니다.

○**조배숙 의원** OECD 기준으로 하면 다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지 않습니다. OECD ……

○**조배숙 의원** 보세요,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조배숙 의원** 국회에서, 다른 아닌 국회의 예결특위에서 한국재정학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이 선진국 OECD 기준하고 다르다’ OECD 기준에 의하면 채무 범위가 넓어서 2007년도 계산을 해 보면, 선진국 기준으로 계산하면 GDP 대비 76.3%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배숙 의원**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것은 무책임한 발표입니다. 어느 교수분이……

○**조배숙 의원** 그것은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어느 교수분이 용역을 받아서 발표를 했는데……

○**조배숙 의원** 교수가 아니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시간을 가지고 얼마든지 논쟁을 하면……

○**조배숙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조배숙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거기에 보면 금융부채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아, 그래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들 충분한, 그것 반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조배숙 의원** 다름이 아닌 국회 예결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것 자료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세에 대해서, 사실 감세를 하면 고소

특층이 소비를 하고 그리고 또 대기업이 투자를 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조배숙 의원** 사실 지금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층은 소비 성향이 낮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산층이나 서민을 위해서 복지 지출을 해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그 층에서 소비를 함으로써 내수가 진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국가적으로는 복지 지출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조 의원님의 말씀은 원론적으로는 저도 큰 이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같은 것을 예로 들면…… 어제도 감세 논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국회에서 이러한 건전한 논쟁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쪽이 생각하기로는 감세를, 법인세를 왜 낮추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감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예.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각 법인세를 낮추어 줌으로써 기업의……

○**조배숙 의원** 장관님!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조배숙 의원** 장관님, 그 논쟁은 조금 나중에 하시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경제 활력을 기해서 나중에……

○**조배숙 의원** 제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 답변 지금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배숙 의원** 복지 지출을 좀 늘리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을……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당연히 지금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복지 재원이 우선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 급한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복지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재원을 늘려야 복지 지출을 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도 저희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보면 복지 쪽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도 사실은 거의가 복지 쪽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조배숙 의원** 그래서 복지 재원을 어떻게 늘리시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런데 문제는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감세를 해야 그런,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또 국제 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법인세율하고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인해서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커지고 거기에서 재원이 마련되면 그 재원을 가지고 복지 쪽 지출도 늘려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리적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세를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감세다, 그런 주장은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예요.

○**조배숙 의원** 그런데 감세 부분에 대해서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감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그 재정정책 효과를 검증한 결과 일시적으로 실업보험 혜택을 연장해 준 것이 효과가 가장 컸고 소득세나 배당소득세 인하는 가장 비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 지출을 좀 강화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육, 육아, 아동수당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노령화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노령연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조배숙 의원** 그런데 7만 원 이상부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등록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자금 대출을 하고 있는데 시중 이자보다 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후불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시간을 줄이는 뜻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원론적으로 해 볼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의 수입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아동수당보다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 분야 지원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올해도 아동 보육 분야에서만 3조 5000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여유가 더 있으면 아동수당을 추가로 주입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또 기초 노령연금도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1인당 수령액이 8만 8000원입니다. 부부간에는 14만 1000원을 주고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3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 주면 어떠냐, 재정의 여력만 있으면 30만 원 아니라 50만 원도 해 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또 등록금 후불제도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저희들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 후불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여력이, 어려운 가정을 가진 대학생들이 자기 돈이 없어서 학업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지금 보면 학자금 융자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취업이 되지 못한 대졸자가, 나중에 원리금 상환을 유예도 해 주고 있고 또 장학재단 출연을 통해서 대출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등록금 후불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런 것도 결국 재정의 여력 이런 문제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학 진학률이 약 85%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감안해서 대학생들이 돈 없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을 넓혀 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다음에 MB 물가지수를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생필품 52개 품목에 대해서 MB 물가지수라는 것을 만들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MB 물가지수요?

○**조배숙 의원** MB 물가지수요. 모르세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것은 제가 잘,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MB 물가지수라는 것은 잘……

○**조배숙 의원** MB 물가지수를 모르세요? 52개 품목 정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나중에 MB 물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시중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더 물가가 올랐습니다.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정책적인 수단도 없으면서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그저 따르다가 결국은 국가가 망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관리를 했는데 어떻게 정부가 관리한 물가가 그냥 관리하지 않은 소비자물가보다 더 높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OECD에서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보도할 때 그런 부분도 빼놓고 보도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알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MB 물가지수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아마 작년인가에 국민의 생필품에 가까운, 이러한 중요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물가 오십몇 가지를 뽑아서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저거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아마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그런 이름이 붙거나 그런 모양인데요, 물가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관리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물가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기능에 의해서 돼야 되는 것이지요.

○**조배숙 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관리를 하지 말아야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마 그것은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조배숙 의원** 그러면 그렇게 보도를 하지를 말든가.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정부가 관치를 통해서 물가를 관리하자는 뜻은 아니었고 정부가 일함에 있어서 주의를 가지고 예의 주시해야 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국민 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 특별히 더 유의해서 보라는 뜻으로 얘기가 됐던 것이 아마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추경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심지어는 학습보조교사가 한 달에 32만 원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고요. 그리고 또 업무능력을 향상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단순 노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사실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이와 같은 심각한 청소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층이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저희로서는 이것이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턴 근무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또 기업에 가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멘토로 삼아서 인턴 사원의 역량이나 실무 능력을 배양시키는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부문에 인턴을 우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일부가 취직이 되어서 나가는 그런 인턴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영구적인 이와 같은 방편은 물론 아닙니다.

○**조배숙 의원** 저는 어떤 중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세어링으로 지금 어느 은행의 인턴을 보면 40%가, 인턴들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단의 프로그램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이것은 선심성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막 시작을 한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을 다시 평가해서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리고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입니다.

지금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임시국회에 상정이 되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 국책은행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을 민영화할 때 과연 민간은행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항간에는 이것을 민영화함으로써, 저는 어떤, 이게 상당히 덩치가 큼니다. 지분만 해도 20조가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인수할 것은 대기업이나 외국 자본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게 은행 하나를 떼어 주려고' 이것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

심이 듭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은행은 2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기능이 하나 있고, 하나는 민간금융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산업은행 내의 민간금융이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민간 영역에서 야기되었던 시장 마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원적으로 해소를 해야겠다 하는 뜻으로 시작을 했고요. 당연히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SOC 기반 확충이라든가 또 지역의 개발이라든가 그 연장으로 인한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와 같은 공공적인 성격은 계속 정책금융 분야로 남아 있도록, 그래서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아시다시피 '한국정책금융회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통적인 산업은행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산업은행 속에 있는 민간금융 역할을 하는 것은 떼어서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민영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민영화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지금은 금융위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좀 성급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제2의 산업은행을 만들 거라면 저는 지금 있는 산업은행을 잘 구조개혁을 한다든지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경제위기가 이렇게 몰아닥치는 이 시점에서 산업은행법이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바로 민영화할 생각은 없고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하겠고, 또 산은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정책금융 기능은 확고히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다음에 사외이사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올 초에 중요한 상장기업 가운데 새로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했는데 그중에 10.2%인 15명이 이명박 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인사로 나타났다고 시민단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

○**조배숙 의원** 그런데 그중에 여러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지난번 총선에서 낙선한 충남 모 지역 그리고 인천 모 지역의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회장이 SK에너지, LG전자 이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런 정치인들이 전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합당한 인사라고 사외이사로 선임이 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 사외이사제도는 아시다시피 기업 내부 또 외부의 감시장치를 강화해서 최고경영자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선출되는 사외이사들이 물론 자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국회의원이거나 정치를 하시던 분이라고 해서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국회의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통한 분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배숙 의원 그런데 보면 총선에서 떨어지고 어떤 보상 차원에서 ‘자리 챙겨 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그것이 어떤 로비의 창구로 변질될까 봐 그것을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외이사가 선임 과정에서 좀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러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리고 또 지금 MB 정부는 정말 “비즈니스 프렌들리이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세일즈맨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KAI의 T-50(초음속 고등훈련기) 40대를 판매할 수 있는 좋은 호기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그 연한을 알아보니까 중간에 정해주 사장이 임기가 2년 4개월이나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매자인 아랍에미리트 왕자와 친분 관계도 있고, 그리고 그 왕자가 본인이 파일럿 출신이기 때문에 직접 여기 와서 T-50 시승도 해 보고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구매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낙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완전히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개울을 넘기 전에는 말을 깔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전체적인 국가 이익을 놓고 왜 자기 사람 챙기느라고 이 중요한 국가 계약을 놓쳤는지, 저는 이 부분 납득이 안 갑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정해주 전 사장은 제가 한

20년 전에 상공부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고 한데 아주 훌륭한 자격을 가진 공직자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번 고등훈련기 T-50 아부다비 수출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장의 선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는, 사실 T-50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저도 타 봤는데요, 사천에 가서. 이게 상대적으로 다만 경쟁사에 비해서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제 방위산업계에서 KAI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런 모순이 있는 데다가 이번에 아부다비가 택한 이태리 회사는 사실은 지명도도 높지만, 우리 정해주 사장이 황태자하고 친했다고 하지만 황태자가 이태리에서 공부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태리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태리에 주기만 했지 결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1차 선정만 했는데 저희로서는…… 이제 자기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태리 비행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우리는 이미 그 사용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이태리에게 이것을 뺏겼습니다. 마는 검토 단계를 거쳐서 다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저는 그것은 아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제적인 거래 관계는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아랍에미리트에서 그쪽에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다고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올 초에 방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계약이 실패한 원인은 그 사장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데 이걸 자세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요, 지금 물밑으로 아부다비와 계속 여러 가지로 접촉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고, 저희로서는 이 문제를 결국에는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성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을 아마 성공을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서운한 일이겠습니까마는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배숙 의원** 저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조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식품부장관님, 나오십시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농식품부장관입니다.

○**조배숙 의원**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뉴질랜드 방문하셨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조배숙 의원** 그래서 보조금 없는 농업 개혁을 주문을 했습니다. 뉴질랜드를 보고 “뉴질랜드가 보조금을 없앴기 때문에 경쟁력이 강화되어서 이렇게 농업대국이 되었다” 그런데 좀 이 부분은 저는……

뉴질랜드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상황, 틀립니다. 틀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보조금을 없애는 개혁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고요. 오히려 저에게도 몇 번이나 누누이 강조하신 게 “농촌을 살리는 길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이번에 보조금을 축소하는 그런 식으로 개혁이 된다고 오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구조를 개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중에 낭비성 또는 어떤 농민, 농어업의 자립을 해치는, 자율성을 해치는 그런 보조금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보조금들이나 또는 도덕적 해이나 또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혁적 차원에서 손질을 해서 효율성이 높고 또 농어가 소득에 직접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자는 겁니다.

○**조배숙 의원**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농업을 경쟁 위주의 그런 산업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물론 없으면 좋겠

지만 그러나 세계 각국이 다 보조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산업이나 신발산업이나, 이 사양산업은 보조금 주는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농업은 다 줍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농업이 산업이 아니고 농업만이 가질 수 있는, 농업만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에게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조 중에 할 수 있는 허용보조가 있고 금지보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허용되는 보조, 다시 말해서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시켜주는 소득 안정 이런 쪽에는 보조를 오히려 늘려 갈려고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보조금들은 다른 생산적인 데로, 그렇게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4월 국회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정부의 저질 일자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빚더미 추경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부자감세 등 관련 법률안은 그 처리를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합니다. 가슴을 열어 야당의 충정을 받아준다면 우리 국회에서 분명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희상** 조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재경 의원 소개로 경남 진주시 봉래초등학교 어린이 123명 인솔교사 다섯분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조해진 의원 소개로 경남 밀양시 창녕군 지역구민 스물여덟 분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성린 의원입니다.

다양한 정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 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경제 대책 중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 보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감사합니다.

○**나성린 의원** 아마 로드쇼도 없이 했다고 그러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정말 반가운 뉴스입니다. 로켓 발사 이후에 오히려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의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사라짐으로 인해서 외평채를 당초에 10억 불 내지 20억 불 정도 예상했었는데, 어제 타임을 저희들이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장에 진출해서 주문이 약 80억 불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래에 발행된 외화 조달 스프레드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30억 불을 발행에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성린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나친 비관도,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우리 경제는 어렵지만 자료 1에서 보듯이 경기 하락세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머지않아 바닥을 치고 U자형 회복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경제 전문가이신 나 의원님 지적처럼 지금 몇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공업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이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이나 주가 등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수출과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IMF와 OECD가 경제 전망치를 계속 수정하듯이 세계 경기전망은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그런 혼재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의원** 대다수 언론들이 우리 경제만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2008년, 작년 우리 경제는 자료 2에서 보듯이 우리 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1% 성장. 우리 경쟁 상대국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멕시코 등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이 점을 좀 널리 알려 가지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나성린 의원** 저는 IMF 때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변수가 우리한테 워낙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대외 변수를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의 대응자세에도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의 기업 경쟁력이나 금융 건전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현재 또 여러 가지로 경제 전반에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3을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 소비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해외 소비 거품, 또 교육 거품도 줄어들고 있고, 부동산 시장, 노사관계 등이 상당히 구조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아주 좋은 징조라고 보고요.

특히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나친 비관을 경계하고, 부당한 정치 공세를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부른 낙관은 금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약간의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위험성이 제거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융불안과 경제 악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적인 경제 악화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빨리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은 그러한 전제조건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기본적으로 나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합니다. 지금 상황은 단기적인 상황 변화에 일회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경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계속 유지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해서 관련되는 재정·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원님 지시한 것처럼 위기 이후에도 대비해서 꾸준한 구조조정, 체질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녹색성장, 또 서비스산업 선진화 이러한 부분이 착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성린 의원 저는 다섯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내수 활성화 그다음에 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결, 세 번째는 금융시장 안정화, 네 번째는 부실기업과 거품경제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 마지막으로 국회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수출이나 소비 또 설비투자가 금방 증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나성린 의원 그렇다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활성화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내수활성화에서 가능한 것이 부동산시장 정상화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 4에서 보듯이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난 4년 동안 월별로 거래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직까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경기침체 지속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지방세수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에서 취득·등록세가 차지하는 게 거의 50% 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방의 부동산 거래가 죽어 있으니까 지방세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관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동안에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규제들을 많이 정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경제논리에 맞게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왔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수도권외의 전매제한 완화라든지 재건축 핵심규제 완화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마는 실물경기 쪽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아직도 주택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동산대책의 효과도 반감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들이 나름대로 또 효과를 본 측면도 있어서 금년 들어서서는 주택가격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고 거래량도 일부 회복되는 그런 조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부동산시장이 정상화에 가까웠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세제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또 부동산규제 완화가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제가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현 정부 들어와서 기존대책, 그리고 4월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 또 제가 최근에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서 건의받은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좀 완화해 주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토지 쪽은 우리가 전혀 세제 완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1가구 다주택 양도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장관께서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 지금 양도세를 중심으로 일부 국회에 법안이 나가 있고요.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전반적으로 양도세제 검토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가구 양도세 관계는 필요하면 좀 더 세제상 규제를 좀더 완화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보유자산을 매각해도, 어제도 말씀드렸습시다라는 주민세 까지 포함하면 66%까지 과다한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대폭 완화해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관계된 일부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다주택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당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양도소득세의 효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인데요, 양도소득세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투기 완화가 있고, 투기 억제와 있고 다른 하나는 거래를 동결시키는 동결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결효과가 훨씬 큽니다. 부작용이 큰 것이지요. 그래서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래를 좀 정상화시키자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투기를 억제하시려는 분들은, 만약에 투기가 재연되면 다시 투기지역을 재지정하면 됩니다. 이건 시행령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또 15%포인트 탄력세율로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될 것이다,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

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같은 것입니다. 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세제를 운용해 감에 있어서 언제나 유의해야 할 것이 과세 형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의원 부동산 세제와 더불어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요, 자료 7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부동산 규제,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완화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단말기에 나와 있지만, 그런데 현장 전문가들은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획기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앞으로 전개될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예의 주시하면서 세제 변경 이런 부분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다음에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더불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최근의 서비스산업 비중·성장률을 한번 봤습니다.

자료 8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걸 보시면 최근에 서비스산업이 여러 가지로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선진국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선진국으로 진입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경제 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가자, 또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자는 말은 많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볼 때 우리 사회 이념적인 규제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해소되지 않고는 교육이라든지 금융 등등에서 이게 참 해결하기 힘들거든요, 의료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일부 말씀

이 계셨습니다마는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특화를 하면 저희들이 국제사회에서 충분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특별히 무슨 자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리소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해관계 집단의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적 노력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 유발 효과도 보면 서비스산업이 다른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어떤 업종보다도 고용유발효과가 큼니다. 또 부가가치도 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산업을 어떻게 선진화할 거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10개 분야의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고, 그동안에 각 분야별로 1회씩 10회에 걸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지금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를 우리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도 키워야 될 핵심 산업으로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예, 그 부분은 아마 본격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추경 편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큰 폭으로 추경을 편성했는데 추경 규모가 너무 크다, 슈퍼 추경이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이번 추경 규모는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결손분의 보완 또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일자리 유지·창출,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적정 규모로 편성했다고 봅니다.

경제 위기의 극복만을 생각하면 추경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마는 재정수지라든지 재정의 건전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회복을 하는 데 크게 하나의 전환점 내지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저도 추경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데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IMF 때 GDP 대비 3% 정도 했거든요. 이번에도 GDP 대비 3%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다음에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면, 자료 9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나라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10을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야당들하고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각 당, 4당을 비교를 해 봤는데 여기에서 세입경정예산은 빼고 우리 당 17조 7000만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크게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민노당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큼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부 야당에서 세입경정예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1조 2000억 원에 대해서. 그런데 장관은 이번에 세입경정예산을 추경예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만약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지금 세입경정이 11조 2000억인데요 세입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출은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11조 2000억을 지출에서 삭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라 운영이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성린 의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또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쟁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편성해 가지고 세수가 초과돼서 남으면 우리가 올해 국채를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런 약속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야당과. 그래서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나성린 의원 이번 추경을 두고 토목예산이니 삼질예산이니 하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전통적 SOC 예산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리고 4대 강 개발도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환경 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매년 홍수 예방과 수해 복구에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아세요, 대강?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최근 5년간 홍수 예방에 들어갔던 돈이 평균 1조 1000억 수해복구비에 4조 2000억, 5조 3000억 정도 됩니다.

○**나성린 의원** 5조 3000억 정도 되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나성린 의원** 그런데 이번 4대 강 개발은 본예산과 추경예산 합해도 한 1조 2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러니까 이 점을 좀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나성린 의원** 추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잠시 묻겠는데요. 이번에 경제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순수하게 지출 확대를 통해서 기대되는 것이 약 1.5%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추경과 함께 이루어질 법령 개선이나 제도 개선,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면 한 2%포인트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성린 의원** 제가 볼 때 그게 말이에요 약간 과장됐을 수 있어요. 지금 정부 지출승수를 어느 정도로 전망……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들은 지금 지출승수를 약 0.8 내외 정도로 봅니다.

○**나성린 의원** 그게 좀 높은 것이지요. 원래 한 0.3~0.5 되거든요. 현재 조금 높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조금 높게 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조, 일자리 사업 등의 비중이 이번 추경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추경에 따르는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구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점이 감안되어서 이번에 지출승수를 조금 더 높게 본 것입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요. 이런 것은 너무 우리가 과장할 필요는 없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알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사실 지속가능하고 좋은 일자리

는 기업 투자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세도 하고 투자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규제도 완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당에서는 감세하고 규제완화하면 또 일일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감세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감세는 감세 나름대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특히 법인세 같은 부분은 더구나 국제시장에서 다른 나라와 경합 관계에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시장에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 인하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하 추세에 그 궤를 같이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성린 의원**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이게 말이에요, 정부보고 자꾸 돈을 쓰라 그러는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세수로 들어오는 것인데 세수의 기초 출발점은 기업 투자지요.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고 해야지 세수가 들어오는 것인데,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금 조치를 취하면 다 반대하니까 제가 볼 때 참 대안도 없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채 발행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인한 국채 발행 규모가 얼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총 국채 발행이 약 16조가 좀 넘는데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국채, 소위 국채시장 조정을 위해서 시장 관련 국채 발행을 축소함으로써 실제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는 7조 3000억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어제 장관께서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 왜냐하면 시장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는 걱정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고채 소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좀 더 줄 필요가 있습니

다.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시장 소화 여건 조성을 위해서 국고채 발행 원활화 방안을 지난 3월 25일 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채 수요 기반 확충, 인수·유통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성린 의원** 한국은행의 인수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할 단계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 또 비교적 풍부한 유동성을 보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다음에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나라 2차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 없는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위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습니다.

○**나성린 의원** 국내 은행 중에서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는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다고 봅니다.

○**나성린 의원** 최근에 환율이 하락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아시다시피 환율은 기본적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시장에서의 외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환율이 안정 경향을 보이는 것은, 우리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고요. 또 우리 대외신인도 증가에 따라서 외화유동성 공급이 지난번에 포털에서 7억 불 발행에 성공을 했고 또 지난달에 우리 하나은행에서 10억 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어제 외평채가 대단히, 우리 국가 소버린 펀드인 외평채가 성공적으로 조달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환율이 안정권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성린 의원** 그렇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이 결국 외환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최근에 공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외화 공급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 또는 국내인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들이 지금 외화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회에서 동의한 1000억 불의 지급보증동의안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또 그것을 기간을 늘리는 조건 변경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 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성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 좀 나와 주세요.

국제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부장관한테 질문했고,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 우리 금융건전성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료 12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 진동수**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그래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최근에 BIS 비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자본확충펀드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융안정기금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후순위채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약간 편법이고 은행들의 자구노력이 중요하거든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어떤 그런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보입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은행들이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자구노력, 특히 증가를 많이 해서 자체 노력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BIS 비율을 달성했습니다.

○**나성린 의원** 유상증자를 많이 했군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했습니다.

○**나성린 의원** 최근에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

이것을 많이 거론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공적자금을 강제로 그렇게 투입할 가능성까지는, 물론 일부 금융권에서 저축은행이라든지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마는 아직 전체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유동성 지원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고요. 특히 중소기업에서……

자료 13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많이 확대했는데 이게 중소기업들이 아직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최근에 사실상 보증이 많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에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절대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그러나 최근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자금사정에 대한 불만은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제가 듣기로는 보증 심사에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심사가 안 된다 그런 불만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보증기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야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단기부동자금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가 많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나성린 의원** 어떻습니까, 규모나 완화 대책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해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최근 조금 조짐이, 회사채 발행 같은 것이 잘되고 있고 하는 것을 보면 조금 나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성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금융 불안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감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증권이나 채권 쪽에 장기 이런 펀드에 대해서 비과세저축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알려져 있다가 최근에 조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IMF 때 구조조정을 상당히 했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나성린 의원** 제가 볼 때 이번이 좋은 기회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구조조정하기 상당히 힘들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간에서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아마 속도감 때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IMF 때의 학습 효과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좀 더 신속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을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적 여건이라든지 또 현재의 여러 가지 기업들의 상태가 그때하고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최근의 걱정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들어 보셨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기업의 상태를 제일 잘 아는 것은 채권금융기관이고 현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체가 금융기관이 주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속도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라고 이를 감독하는 그런 기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좀 속도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나아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그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 공적자금 투입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불법이지요, 그렇지요.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부실기관이 아닌 정상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강제 투입하도록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대개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금융안정기금이라는 게 그런 형태로,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일종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형태로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워크아웃은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이 더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일부 금융기관들 간에 여러 가지 자금 지원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대책을 마련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나성린 의원 조선사들이 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조선사들이 수주한 배를 적기에 못 만들기 때문에 보상도 해줘야 되고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은행들은 빨리 털어버리려고만 하고 RG를 제공하는 보험사들은 회생을 원하고 있어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채권금융기관에 맡겨 놓아서 해결이 안 된다, 정부가 개입해서 조선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하고요, 산업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선뿐만 아니라 해운업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구조조정을 위해서 두 가지 대책이 가능한데 금융 지원 대책과 세제 지원 대책이지요. 자료 14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의 부

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해 주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구조조정기금을 이번에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정상 금융기관이라도 그런 정상 금융기관이나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안정기금을 저희가 이번에 도입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저희가 IMF 때, 외환위기 때 했듯이 부실기관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예금보험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지금 일부에서 우려가 여러 가지 기금이 너무 많다…… 구조조정기금, 은행자본확충펀드 또 금융안정기금 해 가지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전혀 중복되지 않고 다 기능이 다르고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면 다 각각이 금융기관의 상태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또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나성린 의원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 원은 아직 다 조성이 안 됐지요, 민간 부문에서?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것은 소위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있을 때 조성하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한 부분은 조성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나성린 의원 아직까지는 12조 원 가지고 그냥 하고……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알겠습니다. 정책금융공사 설립,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지금 설립추진단 만들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상호저축은행 부실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아무래도 그동안 금융기관들 중에서 저축은행이 PF 같은 데도 많이 운용을 해서 일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성린 의원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금 상시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작년에도 한 서너 개 이미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우선 대주주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고 안 되면 M&A도 하고 필요하면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인수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잠깐 다시 나와 주세요.

구조조정을 위해서 금융 지원이 필요하고 또 세제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어떤 세제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이번 국회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세제 지원을 위해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보시고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의원** 제가 최근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니까 그 이외에 추가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말기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나성린 의원** 자료 찾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고려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지금……

○**나성린 의원** 아니, 그건 제가 당황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나중에 같이……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아까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예, 그래요. 고려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여전히 어렵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더 빨리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과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둘째, 건실한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셋째, 금융시장을 계속 안정시켜야 됩니다. 넷째, 부실기업과 거품경제에 대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신속히 정부 정책을 심의, 의결해서 그 효과가 적기에 발생하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경편성이 늦으면 늦을수록 저소득층과 중소기업들이 상대적

으로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4월 국회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경제 살리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나성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학용 의원 소개로 경기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개리촌 주민 서른 분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정하균 의원 소개로 장애인단체 열두 분, 서종표 의원 소개로 재경호남원로목사회 회원 열아홉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정하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소는 이미 잃어버렸지만 어쨌든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양간을 어떻게 잘 고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를 한번 잃고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소를 사놓아도 금방 잃어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이런 의견들을 논의하는 것도 우리 경제의 외양간을 잘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제안한 경제위기 극복 대안들이 과연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려는 것인지는 좀 더 깊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소위 ‘슈퍼 추경’의 상당 부분이 SOC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분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SOC 건설 분야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외양간을 좀 더 튼튼히 고치기 위해서는 SOC 분야보다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

지고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더 튼튼한 우리 경제의 외양간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장애로 인해 호흡이 짧고 발음이 어눌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별말씀을…… 괜찮습니다.

○**정하균 의원** 정부가 이번에 28조 9000억이라는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은 급격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당초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합리적인 경제 전망을 하고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했다면 소위 말하는 슈퍼추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과연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3월 25일 모 언론사의 행사에서 ‘지금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침체의 고통을 같이하고 있어 향후 회복 과정도 외환위기 때보다 더 길고 더딜 것’이라고 하면서 하반기에 추경 편성의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 현오석 원장이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기 전망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하며 ‘우리 경기 회복 모습이 L자와 U자 사이의 모습쯤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2일 기획재정부 허경욱 차관께서는 ‘경제 전망치를 다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셨습니다.

같은 날 장관의 말과 국책연구원장의 말이 다르고, 얼마 안 돼 차관 말이 또 달라지니 이를 듣는 국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경제 전망이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경제팀이 상황 변화에 따라 너무 일회일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장관께서는 향후 경제 회복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정부가 경제 전망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는 본 의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우선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포함합니다.

정부가 경제 전망을 예측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안목으로 접근하라고 촉구하는 말씀 저희들 유의하겠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그야말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지금 혼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생산지표 쪽에서 광공업 생산이라든지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경상수지가 대폭 흑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환율이나 주가 등 아까 제가 외평채 발행 성공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현재 보면 우리 경제 전망을 밝게 하는 측면이고요.

반면에 수출과 내수 이런 쪽 보면 아직도 어려운 경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기구인 IMF나 OECD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고 또 이번 4월 하순경에는 또 다시 한번 추가 하향전망 하리라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다 경계하면서 앞으로 세계 경제 추이나 경제지표 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하균 의원** 다음 질문은 우리가 이번에 경기 부양 목적으로 추경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정하균 의원** 그렇게 됐을 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집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해 아주 필요한 조치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재정 확대정책을 실시했으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8%에 그쳤고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기간 동안에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서 세금 부담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어 민간 소비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재정지출을 하고도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 채 재정건전성만을 해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재정지출은 일단 증가하고 나면 추

소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표에서 보듯이 이번 추경의 경기 부양 예산과 기존 경기 부양 예산을 합하면 총 27조 7000억 정도가 됩니다.

장관님, 이 경기 부양 예산들 2010년도 이후 바로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중 일부는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10년 이후 경기 부양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부분은 예산의 항목이나 성격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남아 있으면서 계속 지출로 지속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테고요. 다음에 많은 부분은 한시성으로 이번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지출 구조에서 빠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항목의 성격이나 사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균 의원** 그러니까 전체로 완전히 ‘삭감된다, 아니다’라고 말씀하기는 어렵고 ‘그 항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한시적 지출 요소는 제로베이스로 돌아가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다른 예를 들면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한 부분은 남아서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할 테고,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정하균 의원** 경기 부양 성공 여부와 경기 부양 예산의 2010년도 이후 삭감 여부라는 두 가지 변수를 놓고 한 연구소가 향후 10년간 국가 채무의 변화율을 예측한 보고서에서는 화면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시나리오는 경기 부양에 성공을 하고 경기 부양 예산을 2010년도 이후 전액 삭감했을 경우, 두 번째 경기 부양에는 성공하고 경기 부양 예산이 일부 유지됐을 경우, 좀 전의 장관님 말씀이 두 번째의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셋째 경기 부양에 실패하고 경기 부양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예측해 본 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증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증세 우려에 따른 민간

소비의 위축도 걱정이 됩니다.

장관님, 만약에 경기 부양에 실패하거나 금년 경기 부양 예산이 2010년도 이후 전액 삭감되지 않고 일부 유지된다면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을 저희도 크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규모를 책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이 감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러한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세입세출 양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입 측면에서는 저희 나라 지금 조세 감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합리한 감면이라든지 또 과세로 전환되어야 할 비과세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조세 감면의 합리적 개편 등을 통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 세출 쪽 보면 세출 구조조정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양면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러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반드시 재정의 건전성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균 의원** 결국은 증세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증세보다는 저희는 조세 감면의 합리적 개편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하균 의원** 조세 감면의 합리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세금을 더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경기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가면 필요할 때는 또 증세도 해야 되겠지요.

○**정하균 의원** 그러니까 증세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경제 현상을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답변이 굉장히 제한적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균 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약화가 될 염려가 있다는 의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을 보면 올해 세수 감소 때문에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가야 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예산안에 비해 2조 2000억과 2조 3000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들로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편성으로 인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가 과연 추경사업을 위한 재원을 제대로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약 5조 9000억의 지방채를 인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4조 5000억 정도는 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부족분을 인수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 2009년도 분예산의 이미 지방채 인수분 6000억을 뺀다면 이번에 실제 추경을 위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는 예산은 약 8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안에 의한 지방채 매입자금 8000억의 인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연리 5%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5% 이상을 주고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답변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어제도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여건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채 인수를 일부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요, 중앙정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를 인수해야 한다는 점도 좀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채 인수 조건은 아까 말한 5%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4.12%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전분기 조달금리를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고요, 인수 기간은 15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만 지금 중앙재정의 여건이 허용을 하면 어려운 지방재정을 왜 안 돕겠습니까? 지금도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돕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필요한 최소한의 지방채는 발행해서 당해 지역에 속한 SOC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경제 살리기에는 같이 동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도 잘 압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 세입에서 지출구조를 보면 중앙정부가 40%를, 지방정부가 60%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채무도 중앙정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봐서 중앙정부가 앞으로도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균 의원** 4.12%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지방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이율입니다. 그것을 조금만 더 낮추는 것이 지방정부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알겠습니다.

○**정하균 의원** 그리고 이번 추경안을 통해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형식으로 내려가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일자리 창출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교부금 지원사업 대부분이 중앙과 지방의 50 대 50의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으로 일부 재원을 부담하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정하균 의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올해 자체 추경안을 의결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용할 자금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또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가 얼마 남지 않은 지자체도 많이 있는데 정부가 매칭사업으로 교부금을 떠넘겼을 때 지방정부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이번과 같은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지방의 교부금 매칭 비율을 현저히 낮추거나 일부 분야는 전액 국고 지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다시 한번 이해를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을 한다든지 해서 같이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만 지방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중앙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한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균 의원 다음은 장애인복지예산이 대선 공약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 그런 의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이 GDP의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가 지금 금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은 1조 3738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약 0.13% 수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하균 의원 그러면 OECD 평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것은 OECD에서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지 지금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하균 의원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시겠지요. ‘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라는 자료에 의하면 OECD 평균 예산이— 2001년도 자료입니다, 물론—약 2.42%에서 2.5%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선진국들 즉 OECD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들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 배정 비율이 낮은 것이 이 부분뿐만 아니고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유념해서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하균 의원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께서는 ‘범장애인계 대선공약 실현 공동행동’이라는 단체에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서 장애인복지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2.5%까지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07년도 11월 21일 ‘2007 대선 장애인연대’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초청 정책토론회’에서는 각 정당의 정책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당시 토론회 내용을 보도한 한 인터넷

신문기사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나라당에서는 당시 김성이 선거대책위원장이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복지예산이 GDP의 0.28%에 불과하다. 이를 2.5%까지 확대하려면 매년 2배 이상씩 올려야 한다. 한나라당이 이것을 해 내겠다. 2.5%가 아니라 3%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 세계 평균이 2.5%라고 해서 꼭 그 기준에 맞춰야 할 필요는 없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님, 2009년도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율은 전년도 2008년도 대비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금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균 지출 증가율보다는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균 의원 제가 자료를 이것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죄송합니다.

○정하균 의원 그래서 복지부의 경우만 보면 3.6%가 증가했습니다. 타 부처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 질문을 하기 24시간 전에 국회의원들의 논지를 사전에 주는 것이 마땅하다면 거꾸로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자료도 분명히 시간 전에 주셔야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바로 챙겨 보겠습니다.

○정하균 의원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복지예산을 매년 2배씩, 즉 100% 이상씩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집권 첫 해의 실적과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활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예산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격차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팔로우업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하균 의원 대선 공약대로만 지킨다면 1년 동안, 첫 해는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2배가 아니라 2.4배씩 증액을 해야 원래 목표율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 예산 편성 시에 올 예산보다

2.4배를 꼭 반영하고 싶은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쯤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렇게 추경안을 심의하고 경기부양책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라 함은 사회적 약자로 경쟁에서 뒤쳐지는 국민들도 당연히 포함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계층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부디 앞으로 있을 예산안과 법안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서민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는 방안이 진정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정하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신상진 의원 소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지역구민 열한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를 출신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입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고 교역규모도 대공황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OECD도 선진 30개국 경제성장률이 -4.3%, 전 세계적으로는 -2.75% 감소하여 최악의 경기 침체를 보일 것이라 전망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수차례 경제성장 전망치를 수정하다가 -2%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주식시장과

환율이 불안해지자 일부 외국 언론은 외환위기설까지 거론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안 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만발해졌는데도 ‘봄이 왔다, 아직 오지 않았다’ 혼동 속에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 의견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보면 경제는 정말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봄은 왔습니다. 그 봄이 희망인지 우울한 것인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봄의 징후들이 우리의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정치권은 과연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하였는지 자성해 봅니다.

국민 여망을 담은 경제 살리기와 공기업선진화 법안 등은 아직도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치국면에서의 폭력 사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경기회복의 조짐이 분명해진 지금, 국민 모두가 각자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하겠지만 정치권의 더 큰 분발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선 질문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정부의 감세와 재정확대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영국이 경상GDP 대비 5% 이상, 일본·프랑스는 3% 이상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재정확장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 만큼 우리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감세와 재정지출확대정책은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서 최근 무섭게 추락하던 실물경기 급락세가 한풀 꺾이고 희망의 지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3월 들어서 무역수지 흑자가 46억 달러를 넘어서 월 단위로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했고, 외환보유고도 3월 말 현재 2063억 4000만 달러로 증가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 주가지수도 1300대에 다가가고 있고 부동산자금의 투자유입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윤증현 장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2월 광공업생산이 5개월 만에 급락 행진을 멈췄고 경기선행지수도 15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경기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를 놓고도 낙관론, 비관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생각이 어떠신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동안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과 금년 초의 급격한 경기하락이 다소 진정이 되는 모습이고 또 오늘 아침 발표한 대로 달러화표시 외화 외평채 30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도 한국 경제에 대한 대내외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출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밖에 보고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총리는 지난 4월 2일 경제상황점검회의 시에 지금은 신발끈을 풀 때가 아니라 더 튼튼히 맬 때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자세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입니까.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2%인 올 성장전망치의 상향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국무총리 한승수** 사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크게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경기의 급락을 보완하는 동시에 규제완화나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재정부담이 없는 성장촉진방안도 병행 추진해서 성장률의 저하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상당히 심리적인 효과, 영향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김재경 의원** 아주 신중한 대처는 좋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그간에 겪었던 심적인 위축감을 생각한다면 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실지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추기에는 조금 부족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 자동차산업의 파산 위험성, 실업과 가계 수입 감소가 카드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 이런 데 대한 돌발 상황의 여지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장 주시해야 될 그런 분야는 어디라고 보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지금 면밀히 점검을 해 나가면서 대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추경예산안도 우리가 당면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일자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문제는 경기침체가 끝난 뒤에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 이후도 대비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녹색성장 뉴딜정책에서는 바로, 녹색 뉴딜정책에서 이와 같이 위기가 끝난 뒤에 질적인 성장을 배양함으로써 이와 같은 경제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는 쪽도 아울러서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FTA에 관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6개국과 이미 FTA 타결이 되었고 또 협상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돼서 국내시장과 수출여건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추가 시장 확보 이런 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한테 부족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FTA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FTA를 어느 나라와 체결할 것이냐, 동시다발적으로 주요국과 체결을 하는데 경제적 타당성 그다음에 정치외교적 함축적 의미 등을 고려해서 대상국을 선정하는데 이 순위는 공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정해져 있기는 한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순위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다자무역협상이 완전히 성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같이 수출의존형 경제는 역시 쌍무간에라도 자유무역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는 지금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일의 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는 EU와 지금 막바지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뿐만 아니라 주요 여러 국가들 간에 지금 검토를 하고 연구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

문에 저희로서는 다자간 무역협상이 실패한다고 할 때에는 이것 가지고 충분히 우리 무역을 신장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생각을 하고 열심히 FTA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입수한 무역협회 연구원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이 순위를 매겨 놓았던데 러시아, 그다음에 호주와 중동협력회의, 인도 이렇게 순위가 죽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저기에서 우선순위로 거론하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중동협력회의하고의 추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러시아하고는 아직 FTA 협상을 개시하기 전 단계인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부터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중동협력회의는 작년 7월부터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해서 올 3월에 2차 협상을 개최하는 등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후자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재경 의원** 제가 최근에 남미를 한 두어 차례 갔다 왔는데요,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한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게 FTA 이후 칠레 시장에서 우리 현대차 판매량이 매년 거의 25%씩 증가를 해서 지금 한 2배반이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FTA 하기 전에는 일본 차가 칠레 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는데 우리 차 판매대수가 일본을 추월해 가지고 2007년, 2008년도에는 연속 1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보다 3년 앞서서 칠레와 FTA를 맺은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GDP의 75%를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FTA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 이런 시사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교역규모가 칠레하고의 FTA가 적긴 하지만 이런 성격과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성과를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FT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도 씻어 주고 자신감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국무총리 한승수** 전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한·칠레 FTA 협상이 끝나고 국회에 왔을 때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농민단체도 이렇게 나서고, 저도 당시에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으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일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FTA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이 된 뒤에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재경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국과 칠레 간에 무역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칠레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 대상에 있는 나라들의 제품보다 훨씬 많은 제품들이 팔리면서 뚜렷하게 FTA의 이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 이와 같은 것을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국민들에게 FTA의 이득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알리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담당할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정부가 체결한 한미 FTA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 현 상태에서는 한미 FTA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종래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다, 우리는 대충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G20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한미 FTA를 거론하면서 ‘양국에 도움이 되고 이를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커크 USTR이 의회 인준 과정에서 한 그와 같은 발언은 그 뒤에 커크 USTR 스스로가 철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G20 런던 회의 때 런던에 가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한미 FTA는 양국의 이해가 잘 균형이 된, 양국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와 같은 협정일 뿐만 아니라 무역뿐만 아니라 경제외적인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굉장히 좋은 협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미 간에 원만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협정안이 양국 의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비준되어서 국민들이 그와 같은 성과를 하루속히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우리 국회의 선비준 필요성에 대해서 강한 희망을 가지고 계시군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의원**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국토해양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고개를 끄덕임)

○**김재경 의원** 지난번 혁신도시 의원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장이기도 합니다마는 정부는 추경을 비롯한 막대한 경제 살리기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혁신도시 건설에는 열의가 없다, 또 공공기관은 원래 지방 이전을 기피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합쳐진다면 혁신도시는 백지화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전할 157개 이전기관 중에서 68개 기관 이전계획은 승인이 끝났고 아직도 89개 기관은 심의 중에 있는데 정부 계획대로 올 상반기에 이게 승인이 다 되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를 어쨌든 4월 중에 한 20개 정도는 승인을 하고요, 나머지 69개 기관은 상반기 내에 승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10개의 혁신도시 중에서 주택공사가 3개, 토지공사 7개가 도시건설 사업자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김재경 의원** 그래서 통합을 놓고 지금 두 기관이 싸우는 바람에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더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검토가 있었는데 이 문제 조속히 매듭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의원님 지적대로 이 문제가 빨리 결론이 나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 추진도 잘 되고 또 공기업 선진화도 될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그리고 이게 통합이 된 후에도 본사의 위치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업무 분장 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정

치 논리라든지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마시고 법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식과 거래 관행에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남강댐 상시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이는 용수증대사업과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추진계획을 청와대에 보고를 하셨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재경 의원** 이번 추경에 남강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재경 의원** 추경에는 없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김재경 의원** 그리고 경남도민과 언론을 비롯한 각 단체가 수위 상승을 반대를 하고 있고, 경상남도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수위를 41m에서 45m로 올릴 경우에 주민들은 자기들의 생명이나 재산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수위상승 방안은 철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철회를 하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현재 이것이 재정사업으로 들어갈 것이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남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이렇게 저희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일단 장관의 답변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수위상승계획을 철회하

지 않는다면 남강물을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이 안 돼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경남도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부산에 물을 못 주겠다, 이 주장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이 되니까 수위를 올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위 상승을 철회를 하고 물 이용부담금을 피해 지역에 지원하겠다는지 이런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위 상승을 고수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수위 상승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강행을 한다면 경남도민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여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저부터 우선 먼저 나서서 반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반드시 이 사업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사항을 유념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이다 뭐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다른 문제를 한번 질문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외신이 한국 경제를 실상과 다르게 보도를 하면서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불안을 부추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제가 대책 강구를 촉구한 바 있었는데, 2월 26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을 '17개 신흥국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헝가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이랬습니다. 3월 1일에는 파이낸셜타임스가 가세를 해서 '한국의 부채'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에 거의 육박해서 아직 안심하기에 이르다면서 외환상황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경제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이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스, 더타임스, 주로 영국계 언론인데 영국계 언론이 왜 이렇게 비판적입니까, 우리한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이만큼 왔으니까 또 세계에서 12~13위 정도의 규모로 경제가 크다 보니까 우리에게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스몰 오픈 이코노미 (small open economy)로서의 비애 같은 것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절히 대처해야 할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분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경 의원 작년에 한참 어려운 10월에도 이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금융위기 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다, 뭐 이렇게 보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대응 방식이 그때나 지금이나 기사 나오면 반론문 작성해서 보내고 이런 정도여서, 아까 장관님은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찾겠다 그러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외신의 생리를 너무 모른다, 그리고 저번에 어떤 외국 주재 기자가 썼는데 자기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과 어떤 신뢰관계 형성을 하려고 잘하지 않는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 이상으로 어쨌든 외국 언론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홍보 체계를 보강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정보 또 자기들이 관심을 가진 정보를 저희들이 우선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신뢰를 획득하는 데 가장 지름길이라 생각하면서도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우리가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부처 간에 해외홍보협의회를 구성해서 홍보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또 그 관계되는 TF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외신 대변인도 다음주부터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 스스로 외신기자클럽 간담회나 BBC나 CNN 등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우리 실상을 알리면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체제도 보완을 하고 저희들이 전달해야 할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경 의원** 외신 담당 대변인이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었습니다. 뒤늦게라도 하여튼 다행히……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바로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그리고 제가 경제 파트라서 느끼게, 장관님이나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정말 영어에도 능숙하고 세계 경제 흐름에도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제대로 활용을 못하나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어쨌든 앞서 지적한 바대로 그런 문제점을 좀 잘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부정확한 보도로 우리 국익과 시장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좀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들어가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입니다.

○**김재경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 아쉬운 점은 이 신성장동력 비전을 지역 균형 발전하고 연계를 시켜서 지방의 성장잠재력도 함께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조금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사실은 저희들이 신성장동력을 확정 발표하는 과정에서 광역경제권과 5+2 선도산업을 확정하면서 가능한 한 저희 정부가 선정하는 신성장동력을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도 저희들이 지방으로 다니면서 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한 지역 발전 전략도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많이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은 정부가 확정된 신성장동력 발전 방향과 거의 다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지방에서 올라오는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쪽에서 그걸 논의해 주는 무슨 채널 같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시지요. 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예, 저희들은 지역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달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다들 이제 먹고살 그런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좀 빠져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회복의 징후들이 뚜렷해지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출 감소, 실업 문제 등 여전히 불안정한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환위기를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 기적을 창출하였다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선진 미래를 앞당기자는 각오와 제안으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김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방청석을 한번 좀 쳐다봐 주십시오.

지금 방청석에는 신안군·무안군에서 오신 지역구민들로 방청석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서 계신 분도 많습니다. 신안군·무안군 분들이 국회를 이렇게 많이 온 것도 처음이 아닌가 싶고, 국회로서도 방청석을 이렇게 가득 메운 일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윤석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들! 국회의장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있음)

고맙다는 마음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는 박수를 못 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윤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석 의원**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무안군·신안군 출신 민주당 이윤석 의원입니다.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며,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힘겹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농촌과 농업, 농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그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오서 가지고 존경하는 이윤석 의원님을 지원하는 거 보니까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윤석 의원** 감사합니다.

총리님, 이번 추경을 일자리 창출, 서민 가계안정 추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 또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복지 시설을 확대하고 하는 중·서민을 위한 이와 같은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이윤석 의원** 그러나 이번 추경은 저소득 취약계층인 고령농민이라든가 영세농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추경 28조 9000억 원 중에 농림 관련 예산은 1.2%인 3485억 원에 불과합니다. 고령 영세농민을 위한 가계 안정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이어서 경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갑자기 더 어려워지고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에 지금 이윤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보완이 될 수

있다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평소에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이윤석 의원님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석 의원** 농촌의 현실은 참으로 어려운데, 총리님도 농촌 출신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이윤석 의원** 농가부채가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농가부채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제가 수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2007년 현재 아마 한 39조 원 조금 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윤석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아침부터 뼈 빠지게 저녁까지 일을 해도 소득이 증가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농가부채의 증가는 주로 농업용 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데서 기인도 되고 또 농기계나 이와 같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한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행스러운 것은 이 농가부채가 증가도 합니다마는 최근에는 자산도 증가하는 현상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부채와 자산 양면에서 본다 그러면 양쪽이 다 늘기는 합니다마는 과거보다 자산이 조금 더 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개선돼야 될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석 의원** 농가부채가 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에 오류도 있고 또 사료나 비료, 농약 값 이런 부분도 있고 수입 농산물 때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이윤석 의원** 그렇다면 우리 총리님, 농가부채가 급증을 했는데 이 책임이 농민에게 있습니까, 정부에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그것을 딱 잘라서 이것이 농민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게 있느냐 질문하신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하여튼 농가부채 증가가 우선 농업용 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킨다든가 농기계라든가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윤석 의원** 총리님, 여기서 저는 명확하게 좀 답변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농민 쪽의 책임이 더 큼니까, 정부 쪽의 책임이 더 큼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지금 말씀드렸듯이 책임을 딱 나눠 가지고 누가 더 책임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다, 정부도 그렇고 또 농촌도 그렇고 힘을 합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와 같은 부채가 많은 농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석 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농가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농가부채 탕감을 대단위, 대단지 농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또 대단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농가부채 탕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전통적인 소규모·영세·고령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농가부채를 탕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이 농가부채를 탕감하는 문제는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도덕적인 해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야 탕감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그냥 한꺼번에 모두 탕감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윤석 의원** 지금 도덕적 해이라든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도, 뭐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서민들의 채무 탕감이나 기업들, 은행들에 대한 대출 상황금, 연기금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가장 열악하고 소외받는 농민에 대한 지금 부채 탕감, 부채 탕감이라고 했습니다. 부채 탕감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그동안에 시행해 온 부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예를 들어 금리 인하해 준다든가 해서 줄여주고 상환 기한 연장 등을 통해서 일시 상환의 어려움을 이렇게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어느 면에서는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성실히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농가와 이렇

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근본적으로 제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탕감은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그렇다면 총리님, 농가부채로 인해서 지금 1년에 농민들이 얼마만큼 숫자가 자살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자살하는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비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경찰청 최근 5년 자료에 의하면 1년에 1000명 이상씩입니다. 농가부채가 우리 농민들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줄을 너무나 우리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신용불량자로 몰려서 자신이 문힐 장소로 남겨두었던 텃밭 묘자리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몰수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부채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될 지경까지 간 농민들에 대해서 정말로 대단히 정부로서는 뭐라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같이 생각을,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석 의원** 지금 이분들은 자신이 죽어서 누울 장소마저도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나옵니다. 자식이 없고 논밭이 없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훨씬 낫다 그 말이지요. 이런 이야기는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질문을 시작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이윤석 의원께서 총리도 농촌 출신이다 그랬는데 저는 강원도 농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신안처럼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농촌의 사정은 이윤석 의원님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하여간 기업을 살리고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170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대한민국 정부였습니다. 39조 원에 불과한 농가부채

탕감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정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부채 탕감에 대한 어떤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적자금으로 기업하고 은행들의 어떤, 자기들이 경영을 잘못했던 것을 책임을 묻지 않고 국가가 지금 책임을 져주고 있거든요. 농가부채 총액이 39조인데 약 8조, 그러니까 8조는 저소득층 고령농 영농, 영세 농민들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5년간 탕감하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말 대통령께 꼭 건의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총리가 나와서 지금 농가부채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분은 농수산식품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소상히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이윤석 의원님께서 농수산식품부장관에게 더 구체적인 대안이나 질문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윤석 의원** 제가 총리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농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실 부서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결단을, 어떤 판단을 이끌어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과 늘 지근거리에서 건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다음에는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농협 설립 목적이 무엇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농협은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농촌이 옳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임무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석 의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농협은 농민에 대해서 영농지도를 해야 되고 판매촉진 같은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물론 신용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신용사업이 지금 과도하게 확장돼 있고 25개 대기업 같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존경하는 이윤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 농민이 필요로 하는 조

직으로 이렇게 환골탈태되고 개혁돼야 한다 하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말로 농어민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는 개혁안을 내고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농협이 지금 경제사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경제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용사업 부분으로, 지금 인원 1만 7000명 중에 1만 4000명가량이 신용사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사업에는 2500명뿐입니다. 자산은 지금 95.7%가 신용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협의 설립 목적과 다른 이런 구조는 잘못된 것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아시겠습니까마는 농협 회장 권한을 아주 대폭 축소를 하고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농협 개혁을 하고 또 농협중앙회 조직개편을 해서 신·경 분리를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개혁에 대한 종합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농협을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맞게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 자료에 의하면 농협에서 1억 이상 연봉을 받고 있는 숫자가 20% 넘고 3300명 정도 됩니다.

총리님도 연봉이 1억은 조금 넘으시지요? 총리님 연봉도 1억 조금 넘으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이윤석 의원** 그런 연봉을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15년 되면 정부 차관급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이 농협중앙회를 정말 재구성하는 그런 개편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농협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농협중앙회의 조직을 완전히 개편해서 농민을 위하는 이와 같은 농협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 개편안의 본뜻입니다.

○**이윤석 의원** 정말 농협이 농민들에게 영농지도라든가 농산물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위한, 농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조직으로 새롭게, 선진 농업국들처럼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적게 하고 농민들이 주도하는 협동체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의하시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습니다.

○이윤석 의원 정말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협이 되도록, 농민들이 이익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농민의 농협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지금 동의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저도 전적으로 이윤석 의원의 그와 같은 뜻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혁하려고 하는 농업협동조합의 내용도 바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윤석 의원 가락시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국내 최대 시장이 가락시장인 것은 맞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이윤석 의원 그런데 가락시장에서는 수년째 참으로 희한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뭐, 대충……

제가 가락시장에는 총리가 되고 나서 몇 번 다녀왔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받았고 또 그 지역 출신인 유일호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가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그러면 한마디로 문제점이 지금 무엇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문제점이야 가서 보는 사람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도매법인 수가 생각보다 적은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윤석 의원 아주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생산 농민들이 지금 정당하게…… 예를 들어서 총리님 고향에서 고랭지 배추가 왔다, 정당하게 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가락동 시장에서?

○국무총리 한승수 저도 가끔 체크하는데 어떤 때는 제값을 받고 어떤 때는 제값을 못 받고 그

러더라고요.

○이윤석 의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있는냐?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가락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통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몇 단계를 거치는데 이것은 단계가 없이 직송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면에서는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석 의원 그러면 총리님께서 지금 가정에서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고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총리가 된 뒤에는 집에서 농산물 구하는 걸 챙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산지에서 생산해서 내는 산지가하고 소비자들이 내는 소비가격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윤석 의원 지금 그 6개 도매법인에서 생산지가격·소비자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 6개 도매법인에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생산·판매되는 채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배추·양파·무·수박·과·토마토·호박·오이·양배추 이런 것들이 생산되고 있고, 또 그 외에 50개 품목이 있습니다, 주요 품목들이. 그런 품목들을 지금 1035명의 중도매인들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오직 6개 도매법인만 독점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기보다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설된 서울시의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만일 고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규정이나 법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윤석 의원 총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농안법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농안법에 관계없이 시장 개설자인 정부가, 서울시장이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아니면 총리님께서 지시 한 번이면 될 일입니다. 6개 도매법인을 1035 중간도매인들하고 똑같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총리님이 강원도 고랭지 배추를 싣고 가면 그 여섯 사람 외에는 손을 댈 수

가 없습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그것을 법을 고치지 않고 여기서 지시를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국무총리 한승수** 지시라기보다는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가 시장 관계자나 출하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도매법인의 수라든가 상장 예외 품목의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와 같이 도매상인들이 담합해서 물량을 조절하고 생산자에게 혹시 피해를 끼치지 않느냐 하는데 IT산업이 발전되고 전자경매시스템이 이루어지면서 과거보다는 도매시장 거래가 전자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담합한다든가 또 물량을 조절하고 하는 것은 옛날보다는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보완함으로써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윤석 의원** 총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을 고치는 게 아니고 어떤 결단을 하시면 되는 데, 대한민국 가락동시장 빼놓고 강서시장도 상장·비상장…… 그러니까 주요 품목만 취급하는 6개 도매법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상장·비상장, 많이 드시는 채소든 과일이든 안 드시는 과일이든 채소든 간에 누구든지…… 평형화되어 있던 말이에요, 평균화. 그러니까 부산 같은 데도 이런 도매법인을 평균화해 놓았어요. 가락동시장만 지금 6개 도매법인이 건재하다 말이에요. 이것 없애야 되는 아닙니까, 이런 상황은?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총리가 지시해서 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니고 서울시장이 주어진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지금 존경하는 이윤석 의원님의 이와 같은 어려운 지적된 문제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얘기는 해 놓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아이, 총리님 제가 그래서 총리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나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결단을 못 합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서 가지고 농민들에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소비자는 봉입니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다시 전국으로 내려갑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제도예요. 이걸 같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농수산물식품부장관이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마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우리 농수산물식품부장관께서 소신껏 모든 일을 잘하고 계

시기 때문에 농수산물식품부장관께 방금 이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 가지고 개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시키고 지시할 것이 있으면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그렇게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로 그 6개 도매법인은 엄청난 로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장 출신들, 시장 후보자들, 시장 그리고 현직 지역의 국회의원들, 농수산부 관계자가 지금 거기 도매법인에 이사로 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 만드시…… 이것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소비자는 제값에 사서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제도, 6개 법인에 대한 어떤 특혜를 허물면 되잖아요? 그 6개 법인이 예를 들면 강원도 고랭지 배추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것을 꼭 쥐고 있던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1035명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5~7%의 수수료를 또 걷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 잘못된 제도예요, 이거.

○**국무총리 한승수**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농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지시해서 지금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시키고 또 서울시장과 의논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234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군이 어느 군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시 신안군이 아닙니까?

○**이윤석 의원** 그렇습니다. 신안군이……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정답을 했네요.

○**이윤석 의원** 신안군이 6.4%로 전국의 꼴찌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윤석 의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삶의 질, 정말 우리가 살 만하다 하는 데 234개 중에 꼴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한번 맞춰 보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은 잘 못 맞추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그것도 역시 신안군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왜 삶의 질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살기가 참 좋은 군이 신안군으로 압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이 돼서 가서 의원님들 뵈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굉장히 삶의 질이, 소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참 좋아보였었는데요.

○**이윤석 의원** 예, 제가 뒤에 환경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 신안군민들은 정부로부터 예산의 특혜를 원치 않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안군을 ‘천사의 섬’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천상 섬이요?

○**이윤석 의원** 천사……

○**국무총리 한승수** 천사의 섬……

○**이윤석 의원** 예.

○**국무총리 한승수** 아름답고 천사들이 아마 살만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윤석 의원** 말씀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섬이 1004개이고……

○**국무총리 한승수** 예.

○**이윤석 의원** 신안군민들은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짜들고 정말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천사의 섬이라고 합니다.

방금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론자들은 “참, 환경이 좋다. 다리를 놓지 말자. 섬으로 놓자” 하는 것은 우리 신안군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배부른 소리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했던, 2005년도에 실시설계까지 마친 지도-임자 간 연륙교는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임자 간 연륙교 건설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만……

○**이윤석 의원** 뭐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이윤석 의원** 또 비금-추포 연도교도 지금 저희 신안군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다리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예산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이윤석 의원님으로부터 듣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신안군이 그렇게 아름다운 지역인데도 생활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듣기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고, 특히 여러 섬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섬과 섬을 다니려고 그러면 배편 보다는 역시 연계하는 다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은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자 정부의, 총리……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저도 강원도 춘천인데, 강원도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다 개발을 시키고 싶지만 국가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중요한 지역부터 하다 보니까 강원도도 그렇고 신안도 그렇고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다리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정부의 재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총리님. 거제도가 40.6%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제대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또 다시 거제대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8.2km 약 3조 5000억, 거기에는 또 바다로, 해저로 3km 4차선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지역 균형발전의 균등한 예산의 분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이제 거제도를 그렇게 다리와 터널로 연계했다고 그러면 그냥 지역이 거제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경제의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경제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거제는 그 지역이 부산, 마산, 진주 등이 있어 가지고 경제활동이 많은 지역인 데 비해서 신안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이게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아무래도 중심부에 있는 섬보다는 좀 멀리 있으니까 경제적인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밀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총리님, 또 무안 공항을 건설한 이유가 정부에서, 무슨 이유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무안은 옛날 일제시대부터

안개도 안 끼고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공항 지역으로는 최고의 지역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좋은 국제공항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지역의 경제활동이나 또 사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무안공항이 개항된 지가 1년 6개월이 됐는데요, 국내선은 몇 편이나 다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굉장히 적은 줄 압니다.

○이윤석 의원 국내선이 하루에 한 편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이윤석 의원 광주공항을, 국내선을 이전하기로 하고 정부에서 광주-무안 고속도로를 7000억 주고 만들었고 3100억 주고 무안공항을 만들었습니다. 또 무안공항은 국제 24시간 자유공항입니다.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공항은 인천공항과 무안공항 둘뿐이거든요. 광주공항을, 국내선을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3월 말까지였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광주지역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무안에다가 훌륭한 비행장을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특히 호남, 전라남도 지역의 항공 수요는 무안공항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광주공항은 아직까지도 포화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대부분 그 지역에 많이 있고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보나 시간을 절약하는 면으로 보나. 그래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윤석 의원 광주 군사공항 이전에 대해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이 문제는 또 국토해양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고 질문을 미리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하고 나왔을 텐데 갑자기 질문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감사합니다.

○이윤석 의원 국토해양부장관!

장관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감사합니다.

○이윤석 의원 다시 처음부터, 무안공항이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은 이 무안공항을 만들 때는 광주공항을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국내선이 광주공항에서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윤석 의원 앞으로 그러면 평생 이전 안 하실 겁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그래서 광주 쪽에서 여러 가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광주 쪽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서 광주 쪽의 국내선을 상당 부분 그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군사공항 이전 계획을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전혀 저희가 검토한 건 없고 검토한다면 국방부 쪽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전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윤석 의원 들어 보지 못하셨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이윤석 의원 그리고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하는 건 지금 어떻게 하시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 문제는 지금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프랑스나 독일이나 노르웨이나 중국이나 중국 푸둥공항 같은 데 전부 KTX를 연결하는데 지금 장관님이 머뭇거리시는 것은 17km에 대한 7000억 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런 면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윤석 의원 그러나 장기적인, 항구적인 어떤 지역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순차적으로라도 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일단 지금 광주까지 문제는 전부 정리가 됐고요, 광주에서 목포까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그리고 전남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연결하는 제주 해저터널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KTX를 바다를 통해서 제주로 연결하는 문제는 엄청난 예산이 들고 또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해저에 건설하는 문제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어서요.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감사합니다.

○**이윤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어촌이 건강하고 잘사는 나라가 강대국이며 선진국입니다. 우리 모두 농어촌이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이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가실 적에 조용히 질서 정연하게 퇴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의원**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북 안동 출신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입니다.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IMF와 OECD, 세계은행 등 유수한 전망기관들은 모두 금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전대미문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GDP 대비로 미국은 14.6%, 중국은 16%에 달하는 대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런던에서 모인 주요 20개 선진국 세계 금융정상들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세계 GDP의 9%, 총 5조 달러를 집행하고 19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재정지출 확대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세입을 고정하고 17조 7000억 원의 세출예산을 추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추경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고 일자리가 되살아나고 정부보증이 확대되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에도 돈이 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질문인데요. 장관께서는 지난 2월 취임하시면서 금년도 성장률을 6%포인트 낮게 그러니까 -2%로 전망하셨고요. 지난달 말에 추경예산안을 내시면서는 2%포인트 정도의 성장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보험선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안을 가만히 보면 6% 성장이 떨어지는 것 치고는 11조 4000억 원의 마이너스, 좀 많이 잡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2%포인트 성장효과에 대한 세입증대 효과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물 면에서도 -15%로 전망했던 수출이 1/4분기에 25%로 줄어들고 있고 또 설비투자도 20% 이상 감소되고 있고 소비도 감소속도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금년도에 2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2월에 11만 3000개가 벌써 줄어들었습니다.

내일 한국은행이 금년도 성장 전망을 발표하게 되고 한 달여 후 되면 IMF 미션들이 와 가지고 다시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예산안 내놓으실 때보다는 우리 경제성장 전망을 좀 어렵게, 낮추어서 보시지 않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거시경제와 예산에 정통하시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신 김 의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침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장 전망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 회복 속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낙관적 요인 또 비관적 요인이 계속 혼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 바깥세상 세계경제의 침체가 당초 예상보다 더 심화되고 있고 또 4월

하순에는 IMF가 더욱더 하향 조정해서 세계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전망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제출할 때 지금 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출승수 0.8~0.7 정도를 적용했을 때 한 1.5% 정도와 그리고 부대 효과는 0.5%에서 한 2%가 금년과 내년 정도에 걸쳐서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러한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종합해서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당초 전망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림 의원 보합 수준으로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광림 의원 지금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당초 저희가 전망했던 -2% 내외 정도에 머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림 의원 추경 효과도 포함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광림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2% 정도는 좀 낮게 보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광림 의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이 집행되고도 성장이 회복 못 되고, 일자리 못 살아나고 또 서민생활이 더욱더 어렵게 된다고 하면 98년도, 99년도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정리하는 2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세입은, 세목별 세입이 연말에 가서 딱 맞아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경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2차 추경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1/4분기 추계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4/4분기에 세계경제가 급격히 불황으로 접어든 이후에 지금 1/4분기도 상당히 나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하면 2/4분기부터 3/4분기, 4/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제2차 추경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림 의원 특히 세입 쪽에서는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김광림 의원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번 추경 총규모는 세입 경정하는 데 11조 2000억 원 그리고 세출 추가하는 데 17조 7000억 원 해서 28조 9000억인데 그 돈 조달하는 재원은 작년도에 남은 세계잉여금 2조 1000억 그리고 각종 기금에서 남는 여유 돈 4조 8000억, 그다음에 환율 올라 가지고 외평기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5조 1000억 해서 합계 12조 원은 정부 자체 내에서 조달을 하고 모자라는 16조 9000억 원을 아마 새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의 대 GDP 비율이 당초 34.1%에서 4.4%포인트 높아져 가지고 38.5%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수준을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서 평가해 주시고, 어제오늘 계속 국회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OECD 기준하고 우리 기준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먼저 말씀하신 금년도, 2009년 GDP 대비 국가채무와, 당초에 저희들이 한 38.5%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 후에 GDP 추정치가 달리 발표됨에 따라서 GDP 규모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포함했을 때도 GDP에서 차지하는 국가채무 비율이 38.5에서 35.6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주요국 평균, OECD 같은 경우에는 한 82%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했을 때도 재정의 건전성은 이렇게 비교하면 저희들이 대단히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일부 혼선이 있었습니까……

○김광림 의원 그러니까 예산 제출하고 나신 후에 GDP 추계하는 계열이 바뀌어 가지고 GDP가 많아져 가지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습니다. 추경 편성 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금년 전망치가 다시 발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채무를 지금 IMF 기준에 의해서 86년도 재정통계편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만약에 OECD 기준에 의한 총 금융부채를 사용하더라도 저희들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까…… 저희도 지금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2012년부터는 새로운 IMF

기준인 2001년 재정통계편람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발생주의회계에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의 TF가 가동 중에 있고 국가재정법에서도 이런 준비기간을 반영해서 국가재정법에 2012년부터 새로운 IMF 재정통계편람에 따르도록 준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그래서 현재는 IMF 86년 GFS 체제로 현금으로 확정된 부채만 보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김광림 의원** OECD 기준으로 가면 그러니까 발생주의원칙을 적용한 금융성 부채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광림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국가기관 전부 다 현재 현금주의지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숫자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김광림 의원** 그런데 추정은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추정했을 경우에 차이가 어떤데는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이 그러는데 보시기에 한 5% 이상 차이 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도 지금 현금주의를 발생주의로 돌리고 지금 86년도 GFS 체제에서 정부가 직접 부담한 확정채무의 금융성 부채까지 합한다 하더라도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5% 정도 수준은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림 의원**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우리도 이 명박 정부의 임기 말에 가면 국가채무의 대 GDP 비율이 40%대 후반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중기 재정에서 보시는 2012년까지의 국가채무 대 GDP 비율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조금 이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2012년까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이러한 수준을 앞으로 국가재정 중기계획에 의해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에 반영해서 10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림 의원** 10월이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광림 의원** 그다음에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지원 대책인데요, 이번 추경 내시면서 5조

3000억 정도의 지방채 인수계획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A시의 경우에는 그 시군에만 22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빚을 안 안꼈다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자체 중앙정부는 빚 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 중앙정부의 재정 사정이 지방정부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인수해 주면서 이자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도 어렵고 중앙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희가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의원님 질문하신 이자 부분에 대한 지원 문제는 나중 예산결산 종합심의 할 때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다음 목적세 정비에 대한 질문인데요, 3개 목적세 중에서 교통세법은 지난 1월 8일 날 국회를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농특세법은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이고 교육세법은 기획재정부에 계류 중인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교육단체를 비롯해 가지고 목적세가 정비가 되고 나면 돈을 적게 받게 되지 않느냐, 손해 보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재원 대책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오 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이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에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축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세가 폐지되는 경우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의 20%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20.41% 정도로 상향 조정하면 교육세 폐지에 따르는 부족분을 똑같이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좀 더 지원이 가기 위해서 20.41%를 20.5%로 상향 조정하기로……

○**김광림 의원** 교부세율을 0.5% 올린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하기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기 합의를 했고, 이렇게 되면 교육재정이 현행 수준보다 연간 약 1400억 원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그것을 좀 국민들에게도 알려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광림 의원** 그리고 4대 강 살리기 사업에서 지방업체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몇 번 부탁 말씀 드리고, 지난 2월 17일 대정부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을 고쳐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그렇지 않아도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지방업체 참여를 통해서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 의원님께서 수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방업체 공공부문 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 조정하는 문제 또 공공 부문 공사 참여 건설업체 최소신용등급 하향 조정하는 문제 또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는 문제 또 지역업체 요건을 입찰공고일 전 9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강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지난 4월 8일 또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됐고요.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하고 포함해서 상반기 중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김광림 의원** 공동도급의무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지방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림 의원** 상반기 중에 마무리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상반기 중에 협의를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5월 달에 나오게 되어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5월 말이면 나오게 됩니다.

○**김광림 의원** 몇 번 부탁 말씀 드리고 어저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옛날처럼 나룻배 정도가 다닐 수 있는 물길·고깃길, 쌓여져 있는 퇴적층의 제거 그리

고 테라피 시설과 자연제방, 산책로, 승마길 그리고 보에 소수력발전 붙이는 것 이런 내용들 전부 포함이 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림 의원** 선도지구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도사업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다음에 강 살리기 사업이 소하천, 지방하천부터 먼저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천의 치수사업은 국가하천 먼저 하고 지방하천→소하천 순으로 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소하천→지방하천→국가하천 이 순으로 되어야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짜기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홍수 예방은 물론 강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마철이 되고 각 골짜기의 지방하천을 통해서 강 본류로 오염원이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현재 국가하천 중심의 물길 살리기 사업과 병행해서 소하천·지방하천 사업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큰 강이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도 함께 살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우선 이번 사업에는 본류와 본류와 직접 연결되는 지방하천을 우선 살리고 또 연차적으로 해서 소하천이나 이런 것도 함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연차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요, 지금 경상북도 봉화·영주·예천을 걸쳐 흐르는 내성천 일부 구간을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상북도 북부는 댐 천국입니다. 안동에 안동댐·길안댐이 있고, 지금 청송에 성덕댐 건설 중

이고, 하반기 되면 송리원댐 건설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붙어있는 인근에 4개 댐이 있는데, 600년 된 고향이 전부 다 물에 잠기고, 산소물에 잠기고 전부 떠나게 되는데 떠난 사람들은 떠난 자리에 강이라도 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맑은 물이 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도에서 보시듯이 송리원댐의 댐 만드는 상류 부분은 지방하천으로 그대로 두면서 그 밑의 낙동강 합쳐지는 쪽에다가 국가하천으로 했거든요. 중간에 비어 있는, 댐에서 36km 되는 그 부분은 국가하천으로 해 가지고 같이 좀 관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지방하천 중에서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성천은 상당히 중요성이 높은 하천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국가하천으로 된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광림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지방경제 살리는 데 그동안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좀 분리 발주해 가지고 금액을 낮추어 가지고 지방 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국토부가 대구시에 발주권을 줬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또 부산시에 발주권을 위임했던 낙동강 대저지구 생태사업 같이 지자체에 수탁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지방 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터파기라든지 잔디심기, 나무식재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수탁 발주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공정이 단순하거나 공기에 지장이 없는 사업은 분리 발주를 해서 지자체의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하고요, 일부 지역에 국한된 단순공

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 위탁하면 상당히 지역 업체 참여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사람과 물이 소통하는 4대 강 살리기가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감사합니다.

○김광림 의원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죄송합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 수요도 많고 대학생·대학 모두가 바라고 있는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대폭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고등교육법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의료인을, 그러니까 간호사를 포함해 가지고 증원할 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은 대한간호사협회하고 또 협의를 하니깐 간호사협회 의견만 강하게 반영되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현재 의료법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3만 3000명의 간호사가 부족된다고 합니다. 지금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OECD 중에서 중간보다 낮고요, 그리고 병상당 간호사 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병실에서 간호사가 수발을 들어야 될 것을 가족이 들고 또 집에서는 아버지, 엄마 병 고치는 데 사표를 내고 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방 병원의 반 정도가 간호사 문제 때문에 병동을 폐지하거나 축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진출하는 보건업은 금융위기 이후에 취업자 수가 5만 명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3만 3000명 부족한데다가 결혼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하고 은퇴하시고 해외취업하시고 돌아가시고 하는 이런 분 전부 다 포함하고 나면 현재 1만 2000명대의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태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간호학과 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10 대 1이 넘습니다. 간호사 시험 합격하면 100% 취업이 되고요. 이것을 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관련 부처에 대한 회의를 총리님께서 한번 주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올립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하여튼 현재 활동 간호사 수

가 사실은 등록된 간호사 수에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실정입니다. 부족한 이유가 간호인력 수급 불일치도 기인한 것 같고, 또 일부 지방 병원 경우에는 간호사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는 하여튼 그동안에 정부가 2006년 이후 꾸준히 간호학과 정원을 증원했지만 지금 존경하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만큼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보건 교사도 도입하고, 특히 이 시대에 사회 서비스의 확충에 따른 간호사와 또 유사 직종에 대한 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간호학과 정원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관계 부처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와 의논을 해서 대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2010학년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전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사진은 올해 84세인 강 할아버지의 냉장고인데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온 빨간색 원형 김장통, 봉사 자치단체에서 온 노란색 반찬통, 껍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 냉장고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 86세의 이 할머니 냉장고입니다. 계란 세알하고 플라스틱 물병만 몇 개 들어 있습니다.

이들 두 분 모두는 똑같이 혼자 사시는 분으로서 복지 서비스 대상입니다. 그런데 강 할아버지는 중복 서비스가 되고 있고, 이 할머니는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80세의 김 할머니께 사회복지단체 직원이 반찬통을 드리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또 다른 방문도우미가 휴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할머니 댁에 이번엔 자치단체 사회복지과 노인계에서 쌀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을 각기 다른 단체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인건비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같다고 보는데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지역별로 사회복지 서비스 실태를 한번 조사해 주시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존경하는 김광림 의원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공급자 위주로 사실 입안이 되어 가지고 유사 중복 서비스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지금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몇 번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쁜 보도도 나오고 했습니다. 마는 현재 정부에서는 민관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구 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또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금년 11월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 등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개인별로 서비스 이력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고, 또 이와 같은 복지 서비스에 근무하는,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기피 현상을 막고 또 가능하다면 능력 있는 분들이 이 분야에 근무하도록 해서 전달 체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사각지대도, 중복도 없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바로……

○**김광림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여건은 누구 하나 선뜻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몇 가지 지표들이 긍정적인 징후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영국 금융감독청의 의장 터너는 지난달 18일 금융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현 상황을 자본주의 발전 역사상 최대의 금융위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의 도약을 위해 작지만 반드시 필요한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대동지환은 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가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기와 함께 온 기회를 잡고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슬기와 기량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 모두 대동의 마음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문희상** 김광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민식 의원 소개로 부산 북구 만덕초등학교 학생 130명, 인솔교사 4명이 와 계십니다. 또한 홍준표 의원 소개로 서울 동대문구를 지역구민 열 분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김낙성 의원 소개로 충남 당진군 지역구민 열다섯 분도 와 계십니다.

다음은 김낙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성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충남 당진 출신 김낙성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공약이었고 그 뒤에 또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우리 국민과 약속하신 것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낙성 의원**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계획, 지금 뭐 변경된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변경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낙성 의원** 그런데 왜 한나라당은 자꾸 균불을 때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고 혹시 정부에서 균불 때라고 불쏘시개라도 건네준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요즘 정치권에서 정부의 말을 듣고 정부 말 대로 하는 의원님들이 계신 줄 아십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김낙성 의원**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지금 수도권에는 전국 인구의 50%, 생산 기능의 60% 이상, 경제·사회·문화 기능의 80% 이상이 집중 과밀화되어서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약 24조가 넘고 또 대기오염 사회비용도 연간 10조 3000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권 인구밀도는 OECD 국가에서 가

장 높는데 여기에다가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한다면 더욱 고비용 저효율 국토 구조로 변화해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과밀화 현상을 막아보자는 것인데 총리께서는 어저께 한나라당 모 의원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수도권과밀화 해소가 과장되었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과장되었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수도권 인구가 지금 2500만입니다. 그중에서 10만이나 20만, 30만이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나간다고 해서 수도권 과밀도가 줄어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서 국가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과거는 규제를 통해서, 수도권을 규제함으로써 지방 발전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적지않은 부작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벌써 여러 번에 걸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조장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합니다. 규제를 풀고 지방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갈 수 있는 다른 정책, 예를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을 조성하기 위해서 30대 선도프로젝트라든가 지역별 신성장 선도산업을 선정한다든가 또 4대 강 살리기를 통해서 지역을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발전 정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성 의원**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현재 수도권의 인구흡인력이 연간 약 21만 명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의 기업도시 또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전국 모든 지방이 골고루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만 떼어 가지고 이는 충청도만 도움이 되지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에는 발전 혜택이 없다는 이런 왜곡된 질문에도 총리께서는 “글쎄요”라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총리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우리 의원들, 특히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기업도시나 또 혁신도

시 등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자립기능을 강화하고 또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복합도시와 관련해서는 무슨 계획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우리가 갖고서 의도적으로 뭘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낙성 의원 그래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행정복합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다 함께 개발을 해서 수도권의 고비용 저효율을 막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켜서 우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낙성 의원 한나라당 의원 논리대로라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이 망국의 지름길이요, 유령의 도시가 된다'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충청도에다가 망국의 지름길인 '유령의 도시'를 세우겠다고 공약을 했다는 말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이런 망언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어제 발언한 의원님의 그와 같은 말은 결코,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엔 여당의 뜻을 대변한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정부의 뜻을 대변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의사를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제가 그분의 언급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낙성 의원 예, 정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국무총리 한승수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낙성 의원 그런 질문이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총리께서는, 여러 번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속히 법에 따라서 이전기관을 고시를 해 주시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세종시 건설에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아주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등 공직자 비리가 끊이질 않으면서 공직기강이 바로 서

질 않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 있는 그런 데도 감사부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원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복지전달체계에 약간의 무리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많은 이와 같은 경우에 부조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동안에.

○김낙성 의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는 구색만 이렇게 갖춘 감사기구라고 하면 일선 시군의 감사기구를 축소 내지는 아주 폐지를 시키고 시도와 행정안전부, 감사원의 기구를 확대를 해서 차상위기관에서 차하위기관을 감사하는 이런 제도로 바꾸는 것도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일선 자치단체 감사기구 폐지라든가 상급기관의 감사기능 확대는 사실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목적, 자율성 확보를 좀 침해하는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역행할 그런 소지가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지방공무원 감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난 12월에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가지고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연장한다든가 징계의 종류를 신설한다든가 해서 징벌을 좀, 징계를 강화했습니다.

또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외에 횡령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을 병과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찰 인력 보강과 상시 감독체제, 기동 감찰체제 운영을 통해서 감찰 활동을 사실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서 중앙정부로서는 보완을 해 나가면서 철저히 감시체제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낙성 의원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일선 시군에 있는 감사기구는 사건이 터졌을 때 징계조치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전혀 예방도 안 되고.....

○국무총리 한승수 예.

○김낙성 의원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정말 참 감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하여튼 지방자치제도의

원칙 자율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앙의 감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성 의원**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지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김낙성 의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온실가스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가 시행될 경우에 지역별 할당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화력발전소라든가 또 철강, 석유화학 단지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집약이 되어 있는, 예를 들자면 충남 같은 경우 생산 및 투자 위축이 예상이 되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정부가 지금 세우고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드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켜서 운영할 것이냐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루속히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배출권 허용량 할당 방법은 지역별이라기보다는 산업별로 사실은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을 가진 지역은 아무래도 그런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경제적인 영향을 잘 분석하면서 이와 같은 배출권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낙성 의원** 산업별로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력발전소나 철강, 석유화학 이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래서……

○**김낙성 의원** 거기에 대한 정부의……

○**국무총리 한승수**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은 그 녹색성장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기술 혁신입니다.

○**김낙성 의원** 예.

○**국무총리 한승수** 그래서 철강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똑같은 양을 저탄소 기술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기업 스스로가 저탄소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와 같은 기업들도, 또 산업들도 굉장히 녹색성장 위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와 같은 법이 될 것입니다.

○**김낙성 의원** 그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까마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꼭 그렇게……

○**김낙성 의원**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아주 깊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성 의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언론이나 이런 데 이렇게 발표되는 것을 보면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우리의 PSI 전면 참여라든가 또 미국 등 국제 제재가 강화되고 현실화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경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로켓 발사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늘 아침 외평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발행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의 하나의 입증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같은 경우가 생길 경우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할 수만은 또 없는 그런 한 요인도 잠재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경제대책팀을 계속 가동을 하면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이 추진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낙성 의원**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장관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이 2009년도에 4조 8655억 그리고 1차 추경에 5조 840억 그래서

10조 이렇게 책정을 하고, 이 중에 취약층 일자리 창출 예산은 4조 9950억,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낙성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숲의 면적이, 산림의 면적이 약 550만ha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쥐 가지고 20만 ha, 이렇게 숲 가꾸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550만ha를 20ha씩 해 나가면 30년에 한 번 하는 꼴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0년 주기가 아닌 10년 주기로 단축시키려면 1년에 55만ha로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겠는데, 현재 숲 가꾸기 예산 4200억으로 24만ha를 가꾼다고 하는데 이 중에는 2000억 정도 공공근로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축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낙성 의원 이것이 6912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 축제 예산의 약 50% 정도만 절감한다고 그러면 약 3500억, 여기다가 정부에서 한 5000억만 더 보조를 해 주면 55만ha로 숲 가꾸기 사업이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불 예방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임산자원 확보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방지, 거기에다가 에너지 절약하기 위한 나무 보일러 연료 수급을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농촌에 가 보면 100가구 중의 한 98가구 정도가 나무 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를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약 32만 7000개가 생깁니다. 더군다나 이 일자리는 농촌지역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아주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일석삼조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숲 가꾸기 사업을 확대시켜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도 이번에 추경예산에 숲 가꾸기 사업을 당초 예산보다 34.5% 증액된 1081억 원을 받

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목표에 달하려면 아직도 좀 더 많은 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 행사 축제 예산을 줄이고 숲 가꾸기 사업량을 늘리자는 것은 참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 종합 심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행정안전부 또 지자체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 조정할 때 숲 가꾸기 사업을 어떤 부분보다도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낙성 의원 아니, 공공근로사업을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 줘도 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낙성 의원 다음은…… 대기업은 지금 취업난, 중소기업은 인력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장관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임금 때문입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 부처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예산을 좀 통합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서 중소기업 신입사원들에게 최소한도 초임이 생계비 정도라도 이렇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중소기업이 하도급 계약 시에 중소기업이 부품을 납품할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만 해 준다면 중소기업의 이런 인력난도 해소가 되고 또 많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한번 실천에 옮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하도급 거래에 따르는 불공정 문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각 부처별로 이 문제를 몇 번 거론하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재정이 하달되어도 이런 소위 하도급 거래가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중소기업에게까지 이러한 재정의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전달 체계 개선과 함께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고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도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에 취업하는 경우는 임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재정의 부담이나 근로자의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번 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올해 한시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 효과나 결과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성 의원 초임이 8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3분의 1 정도, 40만 원만 보조해주면 훈련비 들일 게 없습니다. 1년간 그렇게 해주면 훈련받아서 숙련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그런 훈련·교육, 이런 부분은 별도로 또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낙성 의원 글썽, 그 예산을 거기다가 쓰면 되는 거지, 뭐 하러 별도로 훈련을 시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래도 또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직을 하거나 실직을 하고 다른 쪽으로 취업을 바꾸고 할 경우에는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도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별도의 지원 대책이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같은 대안을 마련할 수는, 어렵습니다.

○김낙성 의원 그다음에 농촌의 농업용수로 구조물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기계화 경작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령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이?

그래서 특별히 이런 데 대한 정부의 특단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을 농림부에 적게 주기 때문에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관께서 그걸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이번 추경에도 농민들의 영농의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리시설 개보수의 예산으로 지금 4670억 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약 670억 원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 관계 분야에 있

어서 저희들이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낙성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리시설 개보수비만 늘어가는 겁니다.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좀 확장해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알겠습니다.

○김낙성 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경쟁적인 기업 유치로 지금 전 국토는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렇게 개별입지 공장을 맡이지요, 한 동네에 한두 개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시끄럽고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이것을 산업단지, 농공단지화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 국토가 지금 아주 몸살을 앓아요. 대책 있습니까, 이것?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동안 저희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공장을 집단화하는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별입지 비율이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안 되더라도 집단화시키는 것,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만족한 그런 결과는 못 얻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집단화하는 방법을 적극……

○김낙성 의원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성 의원 그다음에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245mm로 세계 평균 880mm보다도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문제는 계절적으로 편중해서 비가 오는데 이 물을 제대로 담아 놓을 물그릇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물 부족 문제가 생깁니다.

○김낙성 의원 왜 안 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대로 댐도 못 만들고 물그릇을 확보 못 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이번에 이런 가뭄을 겪으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낙성 의원** 빨리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금년 중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성 의원**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수돗물 생산시설을 과잉으로 건설하고 그 투자비를 수돗물 요금에 추가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t당 63.9원 하던 것이 2008년도에는 286.6원으로 4.5배가 수돗물 값이 오른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김낙성 의원**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여러 가지 과잉투자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신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성 의원**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김낙성 의원** 들어가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감사합니다.

○**김낙성 의원** 그다음, 농림식품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차관께서는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농사를 열심히 지으라고 권장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민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낙성 의원** 아마 차관께서도 미안한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농민들은 농번기를 앞두고 과연 금년에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 값은 3배가 뛰었습니다. 농약 값, 농기계 값,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 농사를 지을 수 있나?

그러니까 비료 값을 좀 보조를 해 주고 농기계 값을 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정부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민승규** 일단 작년어 보니까요, 2007년 대비해서 화학비료 값이 1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김낙성 의원** 100%가 뽀니까, 300% 올랐는

데?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민승규** 그다음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화학비료 상승분의 한 80%를 정부하고 농협이 지원해서 한 800억 이상 지원을 했고요. 또 올해 계획은 한 236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학비료는 가격 상승분의 한 80% 정도를 정부와 농협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임대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농어민들이 편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농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농약을 쓰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고, 요즘 친환경농업이 하나의 대세다 보니까 이 농약보다는 천적이라든지 이런 생물학적 방제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가격 동향을 보면서 더 모니터링해 가면서요, 농협이라든지 관련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성 의원** 한미 FTA 관련해서 만약에 미국이 자동차에 대한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을 요구해 온다면 우리는 소고기와 농산물이 당연히 그 협상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민승규** 일단은 이 한미 FTA 건은 말이지요, 일단 미국 정부하고 우리 정부 간에 합의해서요 서명까지 마친 겁니다. 그래서 이 협정 내용을 다시 재협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김낙성 의원** 만약에 한다면……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민승규** 그래서 또 한 가지 만약에 하더라도요 지금 말씀하신 한미 간 쇠고기 협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검역과 위생에 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FTA 협상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만약에 추가협상을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말이지요 서로 주고받는 분야가 생기더라도 협상 결과에 따라서 과연 농산물 재협상하는 것이 우리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김낙성 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송전철탄 때문에 민원이 들끓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낙성 의원** 그래서 가급적 철탄 수를 줄이고 기존 철탄을 사용하는 등 민원을 좀 줄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전은 한 번도 이때까지 자기들 계획이 꺾인 적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걸 좀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 피해가 적게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한전에 지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전탑 저희들이 건설할 적에 가장 1차적인 원칙이 경과지에서 철탄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건설하는 것이 저희 기본 원칙이고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지자체 또 주민들과의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낙성 의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피랍된 1명의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수감자 350명과 맞교환하려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단 1명의 자국민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노력에 감명을 받기 때문에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게 되고 600만의 이스라엘이 2억의 아랍을 제압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 단 1명의 생명은 물론이고 인권과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김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수희 의원 소개로 서울 성동구갑 지역구민 스물여섯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진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성동갑 출신의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묻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 때문에 그 성과가 좀 가려져 버렸습시다만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는 추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를 배척하는 데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또 부실채권 정리와 관련한 노하우를 소개하는 등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G20 런던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45년에 2차대전이 끝나고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체제가 만들어질 때에는 전승국만이, 전쟁에 이긴 나라만이 모여서 전후의 국제 경제질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번 회의는 전대미문의 국제 경제위기 속에서 열렸는데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중요한 국가들 20개국이 모여서, 거의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추후의 경제질서를 의논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세계 경제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와 같은 기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의장국의 일원이 되어 있고 내년엔 의장국이 되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경제사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보호무역주의 저지 또 보호무역 조치의 원상회복 또 불량 금융자산의 처리 대책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했을 뿐만 아니라 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지고 다양한 이해국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기는 했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고 돌아오셨는데 우리나라 국가 정상이 국제회의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수희 의원** 그런데도 G20 정상회담 결과가 좀 구체적이지 못해서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여러 가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보호무역 조치를 소위 렉티파이

(rectify)한다, 다시 보호무역주의를 그동안에 세운 나라들은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수치가 각국별로는 배당이 안 되었지만 재정 팽창을 통해서 부양정책으로 한 5조 달러 정도를 전 세계적으로 지출하자 하는 합의를 했고, 또 IMF의 재정을 지금 두 배로 더 늘려 가지고 7500억 달러를 만드는 것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국제금융감독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을 강화해서 이와 같은 것을 강화하자는 등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금방 주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이번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토의하시는 과정에서 다 마치지 못한 것은 올 9월에 유엔총회를 계기로 해서 정상들이 모일 때 제3차 G20 회의를 뉴욕에서 갖기로 또 합의까지 하고 왔고 했기 때문에 이 회의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저는 무엇보다 이제 각국이 재정지출 확대에 합의한 것, 경기부양책에 합의한 것, 특히 저는 재정지출 확대에 부정적이던 EU 국가들이 재정지출 확대에 동의함으로써 이렇게 되면 각국이 재정지출을 확대를 하고 그것이 결국 수요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초기에 런던에서 회의를 하려고 할 때 미국하고 우리와 영국, 또 일본 등은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유럽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재정 확대보다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감독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대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조정이 잘 될까 그랬는데 이번 런던 회의에서 이 조정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공적인 회의였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앞으로 있을 3차 뉴욕 회의와 3차에 이어 또 4차도 있고 5차도 있을 터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 금융질서, 또 경제

질서가 확실히 새로 구축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내년 후년까지 3년 동안 우리가 의장국가, 내년에 의장국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환경,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그러니까 말씀 주셨지만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단일 의장국으로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주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진수희 의원 그리고 특히 이제 반가운 것은 G20 정상회담을 전후로 세계 언론이나 또 우수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베를린의 유력신문인 타게스 자이퉁, 그리고 독일의 4대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한국의 경기부양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특히 4대 강 살리기에 대해서는 이번 G20 참가국가 중에 한국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프로젝트와 친환경적인 경기부양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고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지는 잡세어링 정책을 집중보도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의 AP통신, 또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 역시 우리의 녹색뉴딜을 아주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실 한국 때리기에 앞장섰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도 이제의 “한국의 배드뱅크는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아끼지 않고 있고요.

또 BNF파리바, UBS, 또 JP모건 등도 역시 한국의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면서 투자 확대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디스 역시 “한국의 추경은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고 경기후퇴를 완화시킬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 이처럼 밖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같은 괴리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한국의 이와 같은 위기

극복 노력과 또 위기 극복 뒤에 녹색성장을 가지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고 하는 녹색뉴딜정책이 서서히 알려지면서 외국에서 지금 한국을 가장 앞서가는 나라로 이렇게 각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용하신 중에 HSBC가 한 2주일 전에 발표한 건 얘기를 안 하셨는데 거기서 보면 우리 경기부양책 가운데에서 녹색성장 관련 부분이 81%이고, 영국은 7%이고, EU의 경우에는 한 오십 몇 %여 가지고 한국이 제일 녹색성장에 앞서 갔다는 아주 극찬을 한 보고서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국내에 다시 보도가 돼 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알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줄 압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물론 이와 같은 홍보가, 밖에서 나온 홍보를 좀 더 안에서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밖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그 대응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평가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과를 내서 실제로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극복되는 것을 보여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희 의원** 그래서 글로벌한 소통 실력을, 훌륭한 능력이 좀 국내에서도 충분히 발휘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신뢰 그리고 소통인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진수희 의원**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한 조건은 아니고요. 국민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고 호응할 때 그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고 그것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라고 생각해서……

○**국무총리 한승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진수희 의원** 그 부분에 역점을 두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러겠습니다.

○**진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식경제부차관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진수희 의원** 3월의 수출입동향을 보니까 사상 최대인 46억 달러 무역흑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그렇습니다.

○**진수희 의원** 그래서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수출실적은 최악의 시점을 지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의 노무라연구소도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올 하반기에 무역수지 흑자 그리고 수출증대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지, 또 그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최근 무역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아시는 대로 1월 달에는 한 36억 불 적자가 났었는데 2월, 3월 연속해서 저희들이 큰 폭의 흑자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 현재로서는 저희가 한 40억 불 가까운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흑자가 나게 된 것이 우선은 세계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약세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원유 가격이 하락된 것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수출품목들이 다양화되어 있고 또 수출시장이 다변화되어 있고 한 것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연간으로 무역수지를 한, 작년에 전망할 적에는 연간 한 120억 불 정도 흑자를 예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대로 갈 경우에는 한 200억 불 이상의 흑자를 저희들이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수출의 경우는 세계경기가 지금 침체가 상당 부분 계속 갈 걸로 보기 때문에 한 4/4분기 정도 가야 저희들이 전년 대비 증가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볼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물론 근본적으로는 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와 함께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금융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수출보험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해외 전시회 참가라든지 중소기업들의 마케팅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종합적인 마케팅

지원 활동,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새로운 품목으로 여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 플랜트의 수출이라든지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이라든지 이런 데 역점을 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의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진수희 의원** 기획재정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2기 경제팀 맡아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낙관할 수는 없지만 실물경제 지표들이 다소 개선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제가 질문에 앞서서 쓴소리 몇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몇몇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장관께서 국회를 향해서 거의 비난에 가까운 언사들을 좀 쏟아내셨습니다. 물론 저는 정부도 국회에 대해서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하는 점은 잊지 마시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알겠습니다.

○**진수희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시장 혼란 방지라고 하는 명분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정책을 미리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입법권 그리고 조세법정주의를 명백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법이 왜 필요하고 또 국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반문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거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진수희 의원** 예, 설명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법적 안정성이나 법의 근본적인 법질서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을, 그때도 아마 3월 16일인가 그랬는데 지금 이 예민한 부동산시장을 앞에 두고 부동산 세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이날이 발표 날짜고요, 입법 추진 계획을 이제 발표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내용을, 입법 추진하는 데 입법예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통과가 되면 만약에 2개월이 걸린다 치면 이 2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부동산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발표는 3월 16일 날 하고 시행은 두 달 후에 법이 통과돼서 하게 되면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요, 그러면 이 두 달 동안에 소위 말해서 기존에 계약했던 것은 예를 들면 폐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달 후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만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는지 이런 이해 관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봐서, 아니면 법이 개정돼서 통과될 때까지는 거래가 아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팔 사람은 팔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그럼 이 두 달 동안에,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동결효과(lock-in effec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 개편을 할 때는 전에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두 달 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될 경우에 그럼 두 달을 소급해서 시행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법적으로 보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급입법금지에 반한다 이러는데요,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협의를 하고 그동안의 선례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 소급효도 괜찮다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정 때문에 부득이 입법추진계획을 하게 됐는데, 그 대신에 만약에 두 달 후에 이것의 입법이 당초 의도했던 대로 입법추진계획대로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구가 되겠지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제도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수희 의원**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참 문제거든요. 두 달 후에 이 법안이 개정되면 양도소득세가 분명히 감면된다, 그러면 두 달 동안은 동결효과가 생겨서 매매 거래가 실종되고요, 그전에 계약을 해 놨던 부분은 두 달 후에 법이 통과되면 내가 양도세 감면받는데 뭐 하러 지금 하겠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 파기가 되고 대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결효과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동결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접근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수희 의원** 장관님, 저는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이 저는 국회 입법권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지금 다가구 양도세 중과 폐지하고 관련해서는 또 국회 내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은, 다가구 부분은 상임위 때 또 예결위 때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회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의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발표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각종 생산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내수부진 감소 폭이 좀 축소가 되고 그래서 경기선행종합지수가 14개월 만에 상승 반전하는 등 금년 들어서 실물경제의 지표들이 좀 개선이 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그동안 정부가 했던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지표들의 개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복안이랄까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물경제의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 개선에는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정부의 정책 효과,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영향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이자 도전은 추경예산을 신속히 국회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차질 없는 집행을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와 함께 저희들이 특별히 자원이 필요하지 않는 규제완화,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 사업의 선진화 등 재정 부담 없이도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면 저희들이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가 되리라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그렇다고 해서 결코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러겠습니다.

○**진수희 의원** 1990년대 일본의 버블 위기, 그다음에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도 잠시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하다가 다시 수렁에 빠진 그 사례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도 잘 아시겠지만 외환보유액은 급격한 자본 유출 등에 대비한 최후의 대외지불수단입니다. 작년 9월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덮치면서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감소가 됐지만 이제 정부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시작으로 외환보유액 감소가 줄어들다가 3월 말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48억 달러 늘어나면서 현재 2063억 정도, 그래서 여전히 세계 6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환보유액을 세계 6위 수준으로 확보해 놓고 있고 또 올해 들어서 계속 보유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제신인도가 높아질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말씀하신 대로 외환보유액은 저희들의 최후의 지불 수단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이것이 국제적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3월 달에 다행히도 외환보유액이 48억 불이 늘어서 외환보유고가 2063억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죽 외환보유고가 줄어 왔었는데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있다든지 외화유동성을,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성공적으로 자금 조달이 된다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여기에 집합된 경제 운용의 결과가 경상수지를 통해 나타나고 외환보유액 충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외환보유액이 확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희 의원** 오늘도 기재부가 발표한 것처럼 30억 달러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를

건실하게 봤다 하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향후 발행주간사의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자 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 추후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외평채 발행이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앞으로 외환보유액을 얼마나 더 확충해야 우리가 대외지불능력의 안정성을 아주 안전하게, 확고하게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일정한 기준은 합의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3개월 경상지급액에 해당하는 외환보유고면 충분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하나의 이론이었지요. 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외채 중에서 단기외채, 예를 들면 1년 미만의 단기외채 또는 1년 이상의 외채라도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아 있는 외채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라는 저희는 어떤 경우를 해도 지금 현재 2063억 불은 현재로서는 대외 지불 능력이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또 다른 요인을 가지고, 한 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보유고를 지나치게 보유하는 것은 보유에 따르는 비용이 또 상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선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시장에 떨어지는 심리적인 효과도 감안해야 되고요. 아직은 얼마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저희들이 경제의 기본 펀더멘털이 개선되면 외환보유고도 병행해서 확충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요. 지금 아직은 그런 방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진수희 의원** 제가 운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외환보유액 중에 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국채는 계속 매각을 하면서 자산유동화증권, 즉 ABS는 오히려 확대하고 있어서 이게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외환보유고 내역을 일일이 다 공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수익성보다는 외환보유고를 운용함에 있어서 안정성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희 의원** 이제 추경안 이야기를 해 보겠는

데요. 지금 추경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적정 재정적자 규모하고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추경안의 구성 내용과 관련한 것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규모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규모가 OECD 기준을 적용하면 GDP 대비 80%에 육박한다, 야당의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 GDP 대비 80%에 육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몇 가지만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입니다라는 근거 없는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다 같이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OECD는 발생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IMF 기준은 현금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도 2001년 기준으로 보면 2001년의 재정통계편람을 다시 내면서 발생주의를 저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IMF 것도 2012년부터 발생주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OECD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런 경우에도 GDP 대비 80%라는 논거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선 첫째, 금융성부채에 있어서 말씀이지요 여기에 80%에 육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발생주의에 따라서 일반 정부가 부담하는 금융성, 비금융성 모든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위 준비금이나 선수금에 해당하는 비금융부채는 OECD 기준에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나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이 갖고 있는 부채, 이것은 정부 부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업 활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기준에 의해서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에는 이것도 정부가 갚아야 할 채무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또 민자 유치하는 BTO의 경우에도 말씀이지요 이것은 우발채무입니다. 우발채무이기 때문에

미래 발생 가능성이나 금액 측정이 불가능해서 이 부분도 OECD의 경우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OECD 기준으로 계산을 해 봐도 전체 우리 국가채무가 GDP에 대한 기준이, 비율이 한 40%는 더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추정안을 반영한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5.4% 정도, 이것은 물론 EU 가이드라인 3%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높은 수준이지만 이번 G20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 EU 국가들도 재정지출 확대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3%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현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불안, 우려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점이 G20 국가들의 경기부양 대책들을 보면 대부분 한시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그리고 추가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세율 인하 조치 역시 한 1~2년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정지출 확대가 장기적으로 구조화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도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물론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 단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빨리 전환을 해야 할 것이 세출·세입 양 측면에서 구조조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의 건전성이 회복되도록, 이 위기 시에 취하는 위기 조치는 언제나 한시성으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진수희 의원 또 한 가지,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게 국채 발행 문제인데 국채 발행 물량이 시장에 확 쏟아져 나오면 회사채 발행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상승되고 민간소비나 투자는 위축이 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적자재정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들이 자금을 풀지 않아서 가뜩이나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만약에

회사채 발행마저 위축이 된다면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것은 마련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근본적으로 금융시장에 국채 발행이 이루어지면 금융시장에 있는 유휴자금을 정부가 환수해 감으로 인해서 회사채 발행이나 이런 민간시장의 민간 부문의 활동을 시장에서 크라우딩아웃(crowding out)이라 해서, 구축한다 그래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또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저희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1년 미만의 기한을 가진 단기자금 규모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그마치 800조 가까이 이르고 있고요. 또 어느 때보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 초에 발행했던 국고채가 일차적으로 다른 아무런 영향 없이,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또 금리도 회사채 발행 금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국채 발행이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이 7조 300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국채 발행 또 회사채 발행 이런 모든 시장 머니마켓 상황을 놓고 보면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구축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또 회사채 발행 같은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국채 발행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 금리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빈틈없는 배려 하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희 의원 계속해서 위치(watch)를 좀 해주시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진수희 의원 지금 야당에서는 국채 발행으로 인한 적자재정 문제를 우려를 하면서 감세를 연기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저도 국채 발행으로 인한 시장 부담 등에 대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또 감세가 가져오는 경기부양 승수효과가 재정지출보다 뛰어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면 감세 연기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위기 극복 이후에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감세 정책은 그대로 추진되는 게 맞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추경안 구성 내용을 놓고도 말이 많은데 야당에서는 '일자리 추경예산안이 쓸모없는 일자리 마련에 집중되어 있고 또 4대 강 살리기를 비롯한 SOC 투입 예산은 이제 없애야 된다. 추경안이 철저히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추경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민주당의 추경안 내용 혹시 장관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안하고 많이 다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저기 화면에 비추셨는데요. 규모도 큰 차이가 없고요, 내용도 많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인 중소·서민층 또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야당이 제시하고 있는 안도 저희와 거의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을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 부분의 20만 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오히려 훨씬 적은 35만 명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추경안이 어디가 그렇게 쓸모 있는 일자리 창출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4대 강 살리기 등 SOC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번 추경안에서도 세수 결손 보전 11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조 7000억 원 중에 SOC 투자로 편성된 예산이 불과 1조 9000억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추가 편성된 5조 1000억 원, 저소득층 소득 보조에 편성된 게 4조 2000억, 그것에 비해서 오히려 SOC 투입은 훨씬 적거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진수희 의원 그래서 이것은 정치 공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경안의 구성 내용을 보면 철저히 분명히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추경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장관께서 국민들께 이번 추경안이 바로 야당이 주장하는 서민·중소기업 지원 극대화 원칙에 부합하고 있다 하는 점을 좀 적극적으로 이해시

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알겠습니다.

○진수희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융기관 자본 확충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가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건전한 산업자본을 유입시켜서 은행에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또 은행의 부실채권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산업자본 투입을 통해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지금 자료에 나오는 것을 보면 10대 그룹의 현금 유보율이 787.13%, 잉여금이 자본금의 8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은 자꾸 떨어지는데 기업들은 돈을 자꾸 쌓아 놓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금융 투자의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야 이 돈이 지금 유동성에 목마른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지금 국회에 은행법 또 금융지주회사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2월에 이것이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하는데 하여튼 이번 국회에서라도 좀 처리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 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러한 기업에 여유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터준다는 것은 나라 경제의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의 여유자금이 은행의 자본 확충에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면 아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내역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채권 매입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자금 중계 기능을 분명히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금융기관의 정상화, 구조조정의 성공 이런 것을 위해서는 결국 지금 말씀하신 자본 확충 쪽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해 줌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을 클린화해서 건전성을 제고

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날개로 접근해야 됩니다. 양쪽 다 지금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이러한 관련법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진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1조 원의 신용회복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용회복기금의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저소득층 또 소득 입증이 힘든 무소득층은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소득 입증이 어려운 계층이라 하더라도 연체 없이 6개월 이상 이자를 갚아온 이들에게는 신용회복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지금 환승론을 이용하면서 아마 소득 확인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실질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진수희 의원** 그런데 더 어려운 계층인 저신용 등급자들을 위해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자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정책 대안인데 제가 이것은 법안도 발의를 하겠습니다만 등급별 신용위험도에 따라서 국가가 일부 보증을 통해 신용을 좀 보장시켜 주거나 저신용등급자에 대해서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그 부실채권을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많은 가게들이 저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새로이 기금이나 이런 기구를 또 설치하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추가로 1000억 이상 정도가 반영돼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범위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개인까지 확대해서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수희 의원** 그래도 일단 법안이 발의되면 적

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희망을 보고 긍정을 말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서양 격언을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Make your stumbling blocks stepping-stones’, 돌부리를 주춧돌로 만들라는 충고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돌부리를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도 약할 수 있는 주춧돌로 만들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진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해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전해숙 의원입니다.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자는 데는 여야가 없다고 봅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다음으로 토지가 중하며 군주는 가장 나중이다’, 2000년 전 맹자가 위정자의 기본자세를 설파한 명언입니다.

최근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리병원 허용을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에는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할 국민은 실종되고 재벌과 보험회사의 야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리병원 허용정책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료 분야의 선진화 방안 핵심은 대규모 민간자본을 끌어들이 영리병원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희상 부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일자리 창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의료산업의 발전 또 의

료 서비스의 질 향상,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변화 이런 모든 부분에 의료산업의 선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숙 의원 끝까지 그 답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습니다.

○전혜숙 의원 의료서비스의 생산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잠시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지요?

○전혜숙 의원 의료서비스 생산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나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병원을 하나 설립했을 때 병상 규모가 얼마나 할 때, 선진국의 좋은 병원을 예로 들면 베드 하나당 고용인구가 10명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한 2, 3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고급병원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혜숙 의원 주로 선진국이라면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시스템이 미국도, 영국을 포함한 구라파도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쪽 분야하고 얘기를 해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위 핸드 스킬(hand skill) 손재주라든지 현재 우리의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조합해 볼 때 우리가 의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의료산업을 큰 하나의 소위 신성장동력으로 우뚝 세울 수 있다는 그런 견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그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전혜숙 의원 제가 나라를 여쭙어 보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됐습니다.

생산비 중에 인건비가 40~50%로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장관께서는 경제를 하셨는데도 영리병원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산비가 많으면? 고용을 최소화하겠지요?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인력을 32%나 적게 고용하고 우리나라도 동일 규모의 영리 목적인 개인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인력이 43%나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은데 굳이 일자리 창출효과도 적은 영리병원을 허용하자고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데는 숨겨진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영리병원 허용의 숨겨진 목적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전 의원님, 공론의장에서 어젠다를 놓고 논의를 함에 있어서 제발 그런 식의 접근은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의가 있고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전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는 다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사당에서 어떤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 마이크로하게는 어떤 것이 우리 의료산업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전혜숙 의원 장관님께서 제 대정부질문을 끝까지 듣다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를, 마지막 답에 또 나오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도…… 제 얘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의원 어제 장관님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예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여유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리든 비영리든 모두 똑같은 민간자본입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작은 영리병원을 투입하자고 하십니까? 분명히 일자리 창출 효과는 비영리병원이 높다고 복지부 데이터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체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시장에, 의료에 갖는 기본적인 공공성하고 산업적 측면을 저희들은 동시에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의료 부분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소홀히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의료시장의 시장 진입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처럼 비영리법인 체제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영리법인도 들어와서 같은 산업적 접근의 차원에서 의료산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쟁을 통해서 효율이 증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산업자본이나 저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만약에 영리법인이 의료 산업을 하게 진입을 허용해 주면 저 돈이 갈 수 있는 물꼬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영리법인이 할 수 있는 병원이 들어서면 새 병원의 고용 창출이 지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전혜숙 의원 맞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경제자유구역에도 아직 병원이 하나도 안 서고 있지 않습니까?

○전혜숙 의원 삼성경제연구소의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 과제에 아주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그대로 들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무슨 말씀입니까?

○전혜숙 의원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됩니다. 이런 분야는 국가가 재정을 투자하면 공공성을 띠게 되어서 국가가 불필요한 의료비의 지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목적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면 국민 생명을 사고파는 상행위처럼 자본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본가의 요구에 의해서 의사가 이익 되는 진료만 강요받게 됩니다. 지금도 비영리 의료법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희가 성형외과는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의료인 흉부외과라든가 산부인과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영리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시장을 차별과 보험회사에 넘기지 않고 현행 비영리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장관님, ‘보호자 없어도 되는 병원’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 존경하는 김광립 의원님께서도 질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간혹 인력 부족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그런 가슴 아픈 고충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원 서비스인력을 많이 늘려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간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의 고통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장관님께서 주장하시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성공적으로 시범사업까지 마친 이 사업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보호자 없어도 되는 병원 예산을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누구보다 적극

적인 장관님이 반대할 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니, 의원님, 중간에 잠깐 한 말씀만 드릴까요. 지금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하는데요 비영리법인으로만 의료체계를 계속 가져가면 결국은 많은 부분을 재정에 의존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리 의료법인이 남는 산업자본 이익금을 가지고 병원 산업에 들어와서 병원을 새로 일으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에서 부담을 안 져도 되잖아요.

○전혜숙 의원 장관님, 제 질문 끝에 다 나오니까. 조금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런데 왜 자꾸 그것을……

○전혜숙 의원 같이 답을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이 부분을 정말 공론화해서……

(○전병헌 의원 의석에서 — 다 듣고 답변하세요.)

○전혜숙 의원 경제 분야는 장관님이 많이 아시지만 의료 분야는 제가 조금 더 안다고 보는데, 장관님이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저보다 더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들어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전혜숙 의원 장관님께서 의료선진화방안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비영리병원이라도 학교법인이 세운 병원은 병원 수익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서 법인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마는 의료법인은 50%밖에 인정하지 않아서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의료법인도 학교법인처럼 100% 인정하도록 법을 고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라도 비영리병원 지원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더라도 의료비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

○전혜숙 의원 근거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전혜숙 의원 시간 좀 빼 주십시오. 지금 질문을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장관님은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더라도 의료비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전혜숙 의원 예.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까 제가 중간에 말을 끊는다고 해서……

(○전병헌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주의 줄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전제조건은 미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혜숙 의원 의료비 상승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밖에서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지 않을 소지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보험이 유지하는, 공보험이 급여를 주는 범위를 넘는 부분들, 그러니까 비급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이게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비급여성 부분이 이것은 개인이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영리의료법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보험이 커버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 위에 본인이 사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비급여성 부분만 보충형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 수가 더 늘어나면 병원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병원 의료비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이 더 확대되면 시장원리에 의해서도 가격이 내려오면 내려오지 꼭 올라간다는 가정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전혜숙 의원 장관님, 정말 답변하시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장관님, CT나 MRI 찍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있습니다.

○전혜숙 의원 그때 왜 찍어야 하는지 본인이 판단하고 하셨습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가격 비교해 보고 하셨습니까? 그냥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순응합니다. 그러셨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런 일도 있지만 경험해 본 사람들 얘기도 듣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혜숙 의원 제가 그 예를 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병원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고가의 서비스를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그래서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사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근거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버만 교수가 병원 소유 형태와 의료비 지출 연관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든 병원이 영리병원인 208개 지역의 일인당 의료비 지출이 모든 병원이 비영리병원인 2860개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65세 이상 메디케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 패널조사 결과로 신뢰도나 그 결과의 의미가 대단히 높습니다.

미국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의료비 상승이 없을 것이라는 장관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장관께서는 의료비 상승에 관한 이런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금시초문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니,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는 미국의 US News & World Report Best Hospital은 고난도 진료 부문에 집중한 평가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정부 지원 등을 받아서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비영리병원이 당연히 우수한 평가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평판도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영리병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잘못된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요.

○전혜숙 의원 정부가 어떻게 자료를 조사하는지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GM 등 미국 자동차 3사가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된 주요 원인이 의료비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의료비도 기여했을 겁니다.

○전혜숙 의원 미국 GM과 일본 도요타가 의료비 지출에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GM은 기본적으로

로 현재 노조원들이 퇴직한 노조원과 가족에게까지 의료비와 연금을 다 부담해 주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잘못되고 있는 차제에 아마 의료비가 올라서 더 영향을 주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전혜숙 의원 예, 맞습니다. 역시 장관님 잘 알고 계시네요.

GM이 도요타보다 종업원 일인당 14배나 지출했고요, 차 1대당 300만 원이 넘는 생산비를 했고, 좀 전에 장관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자동차 3사가 겪고 있는 기본은 노조 활동의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아니겠습니까?

○전혜숙 의원 그 결론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퇴직한 직원들에게까지 의료보험과 연금을 부담함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하는데 대당 1500불 상당 이상이 원가에서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동차 회사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을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혜숙 의원 조금 답은 틀린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의료비를 얼마나 지출하는지 아십니까? GDP 대비 무려 16%를 의료비로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미국이 국민의 15%, 우리나라 인구에 버금가는 4500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국가가 민간보험을 키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는 미국의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혜숙 의원 이게 의료시장주의의 폐해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어제 세계가 영리병원을 황금어장으로 보고 현재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에 동의하셨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가 도대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미국은 대신에 저희처럼 이런 공공 체계를 미리 갖추지 못한 상태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전혜숙 의원 저희 나라 공공체계 잘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체계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의료 보장이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실손형 보험이니 비급여니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보험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어제 장관님께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의료기관들의 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나아질 거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것은 일반적인 시장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진입을 좀 자유화해 주면 당연히 경쟁 촉진에 기여할 수 있고 경쟁은 효율을 낳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경제의 원리가 아닌가요?

○전혜숙 의원 장관님, 이 연구소 보고서하고 너무 비슷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좀 곤혹스럽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 연구소……

○전혜숙 의원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하는 병원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전혜숙 의원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하는 병원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습니다. 그럼 인력을 많이 투입해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병원과 영업이익상 인력을 최소화하는 병원 중에 어느 쪽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영리법인 체제로 계속 가자는 것하고 영리법인도 허용해 주자는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존을 하자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부분은 모럴해저드가, 어떤 공공부문이든지 모럴해저드를 낳습니다. 지금 비영리법인만 하자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부족한 재원을 재정에 자꾸 의존해 오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모럴해저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한테도 역할을 주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족한 재원을 이쪽으로 모으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으로 그야말로 경제적인 약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 재정이 좀 더 많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

을 갖고 있습니다.

○**전혜숙 의원**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영리와 비영리 병원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이 투자할 것 같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것도 그렇습니다. 영리법인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민간부문이 맡게 되면 민간부문이 자기 병원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왜 정부가 터주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것을 터주는 것이 의료시장에서도 의료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전혜숙 의원**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 주십시오.

영리병원은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시설의 대형화, 고급화에 치중하게 됩니다. 의료서비스 인력 고용과 장기적인 연구개발에 소홀하게 되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의료의 질 평가에서 비영리병원이 단연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료기관 평가 결과 결과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공공병원과 비영리병원입니다.

그다음 메디케어(Medicare) 중증환자의 영리병원 사망률이 비영리병원보다 25% 정도 더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영리병원은 비영리에 비해 환자에게 보다 비싼 진료비를 받으면서 의료의 질은 낮다는 것이 미국의 사례에서 드러났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장관님이 영리병원을 도입하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데는 숨겨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왜 그렇게……

○**전혜숙 의원** 혹시 본 의원이 모르는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제가 조금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전혜숙 의원** 예.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원님, 그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의료시장에, 영리법인이 의료산업에 들어왔다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 의료법인보다도 효율에서 뒤처져서 의료비는 비싸게 받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으면 환자가 안 갈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영리법인이, 민간부문이 병원을 하겠다고 들어왔다가 그렇게 밀리면 환자가 안 가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런 것까지 다 걱정을 해서 미리 그렇게 걱정을 하셔야 되나요? 소위 고객인 환자가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병원에?

○**전혜숙 의원** 환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을 터주면 그 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안 하겠습니까?

○**전혜숙 의원** 환자와 의료진·병원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국가가 견제해 주기 위해서 건강보험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비급여 시장을 민영보험에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리병원이 당연지정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영리법인이……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전혜숙 의원** 당연지정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보면 오히려 그런 게 질도 높아지고, 뭐 자꾸 그렇게 저하고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주식회사 병원을 양성하는 것이 영리법인 병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삼성경제연구소에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병원을 하게 되면, 지금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과 민영보험 조화를 하고 그다음 영리병원 허용은 병원의 통합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병원의 통합을 유도하고 전국 체인을 만들어 버리면 보험을 갖고 있는 병원 재벌은 자기 보험회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가 지정하는 당연지정제로 인한 의료비를 같이 쓰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의료비가 자연스럽게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보장은 의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당연지정제를 흔들고자 위헌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로서 당연한 이윤 창출 행위를 당연지정제가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위헌소송을 안 내겠습니까?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보험회사와 계약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하고자 할 것이 뻔합니다.

국내 최대 보험회사를 갖고 있는 삼성의 경제연구소가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한 과제로 영리병원 허용,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이 자료이고 장관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너무도 일치해서 제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는 그 페이지가 어디에서 나온 페이지인지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본격이 일체 없습니다.

○**전혜숙 의원** 예.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이 로드맵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나 의료 서비스 질이 어떻게든 간에 민간보험시장을 키우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허물기 위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자는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장관님 현재 장관님께서, 이 자료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장관님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 비율이 몇 % 되는지, 아까 아셨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까 약 70%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혜숙 의원** 그러면 이걸 90%로 높이면 국민 의료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집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러면 의료비……

○**전혜숙 의원** 보장을 90%로 높이면.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의료비 부담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혜숙 의원** 예.

제가 정말 장관께 질문드릴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장관님께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제가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기 이전부터 저희 기획재정부에 의료산업을 포함한 10개 서비스산업을 선정을 하고 의료산업선진화를 지금 정부의 하나의 개혁프로젝트로 추진하여 성장동력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10개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해서 공청회를 전부 다 1회씩하고 전부 10차의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많은 공론화를 통해서 나중에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하나의 제도를 변경하면 반드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찬성하는 의견이고 의원님은 반대하는 측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허물없이 공론화하고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전혜숙 의원**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야당 의원이 말씀드렸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겸허하게 한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알겠습니다.

○**전혜숙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장대비가 와도 물을 담는 그릇이 잘못 놓여 있으면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없고 비록 가랑비가 내려도 그릇이 제대로 놓여 있으면 그릇에 물이 담깁니다.

영리병원 허용과 같이 가계와 기업 그리고 국가의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그릇을 잘못 놓으면 장대비와 같은 30조에 가까운 슈퍼추경으로 돈을 뿌려도 경제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뿌릴 것인가만 생각하지 말고 경제 운용의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다시 판단하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 관료가 자주 만나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금융 자본가들도 소중한 국민이지만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민이 불행해짐을 외치는 국민들은 정부가 더 소중하게 품어야 하는 정부의 방패막이가 절실히 필요한 힘없는 국민입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반대의 목소리도 경청하시고 국민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상적인 토론문화를 조성하셔서 국민이 행복해 하는 정책을 실행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윤성 전해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하시고 오후 많이 가라앉은 시간이라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십시오. 감정을 넣을 필요도 없고 한숨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극히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왜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하십니까?’ 이런 답변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모들이나 또는 사석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국회의원 여러분, 여기 나와서 질문하실 때 꼭 자기 질문에 맞는 답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말은 살아 움직입니다. 어디까지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답답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답답하시다면 준비를 더 해 오십시오.

그다음에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이크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장이 판단하겠습니다. 잔소리 같습니까?

다음은 고승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고승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 이윤성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서울 서초을 고승덕 의원입니다.

정확히 1년 전 치러진 18대 선거를 통해서 저와 동료 의원님들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대로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길은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중소기업이 튼튼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입니다.

○고승덕 의원 지난 10년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특히 서민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희생을 치렀는데요. 처음에 신용카드 남발로 수백만 명의 국민이 신용불량자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상품권 남발로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파산위기로 몰리기도 했고요. 이번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썩 이자로 들어온 외화자금 때문에 건전한 중소기업과 전문가는 물론 중산층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기로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800만 명 이상의 서민들이 돈을 빌리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 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어려움을 들어보고 전문가, 언론인 또 시민단체까지도 여러 차례 만나서 간담회하면서 대책을 들어봤습니다. 그 결과 저신용계층이 비싼 사채를 쓰기보다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시중금리로 500만 원 정도를 쉽게 빌릴 수 있다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가장 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나라당 정책으로 채택해서 국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을 하는 방법으로 서민금융의 숨통을 터주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일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 스무 분의 서명을 받아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역신보 업무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청을 산하에 두고 계십니다. 장관께서 이번 지역신보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예, 받았습니다.

○고승덕 의원 이 법안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지원 대상을 사업자에 한정하고 있어서 개인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이러한 어려운 개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식경제부도 적극 협조하여 동 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덕 의원 고맙습니다.

이번에 정부 재정 100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는데요, 1000억 원이 투입되면 지역신보는 대출 1조 5000억에 대해 보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500만 원씩 대출이 된다고 보더라도 무려 30만 가구의 서민 가정이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게 돼서 무서운 사채나 무등록대부업체를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민 가계는 하루가 급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 취지에 공감하셔서 이달 중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정부에서 지역신보라든가 서민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덕 의원** 다음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 또 부가가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외화가득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2005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의 외화가득률은 약 71% 정도가 되고 일본의 경우는 약 87% 정도로서 일본이 저희보다 높은 외화가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 대체로 우리나라 외화가득률이 70% 정도이고 일본이 9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또 해외에 많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나라의 외화가득률이 일본, 미국에 비해서 이렇게 낮다고 보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그러한 제약이 있고, 두 번째는 부품·소재 산업 쪽에서 저희들이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본한테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승덕 의원**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이 취약해서 중간재의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화가득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수출을 해 봤자 중간재를 판 나라에 이익을 다 뺏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결국 꺾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적자국이 어디이며 적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일본이 최대 무역적자국이고 저희들이 약 327억 불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고승덕 의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300억 달러 대일무역적자 중에서도 부품·소재 수입 적자가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일본에 메모리 반도체를 19억 달러 수출했는데 반도체 장비로 16억 달러를 지출했기 때문에 결국은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벌어들여 가지고 일본에 갖다 바친다, 이런 무역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우리나라 경제도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원화 가치가 낮고 엔화 가치가 높은 원저엔고입니다. 가격경쟁력이 지금 생겼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품산업의 체질 개선이 없다고 하게 되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경제규모 10위권 진입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소재와 관련된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새로운 부품·소재의 국제표준 선점 등을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사실 정부도 부품·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벌써부터 인식해서 2001년에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까지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꽤 있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약 1조 7000억 원을 투입했고 그 결과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흑자 규모가, 일본한테는 적자를 봅니다마는 전체적인 흑자 규모는 2000년 93억 불에서 2008년 349억 불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과의 부품·소재 무역적자는 더 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정부에서는 지난 1월에 제2차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100대 융복합 부품·소재 핵심기술을 확보하자,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약 9000억 원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재자원 확보 전략과 연계한 미래선도 소재기술을 60개쯤 개발하자, 그래서 과제당 매년 약 2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3년 동안 약 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차질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승덕 의원** 추경 등 국가 예산에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승덕 의원** 이상으로 지경부 장관에 대한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은 금융위원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 중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은행주식 지분을 15% 보유하더라도 은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고 Fed가 공식으로 성명을 발표했지요, 그것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주식 보유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10%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준이 아니라고 이미 판정한 15%보다도 5%가 적습니다.

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10%가 지배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10% 정도 한도 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도 원래 보유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법정 한도로 4%를 두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고승덕 의원** 일부에서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법을 보게 되면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상의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지금 막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저는 이것도 좀 부족해서 서로 다른 은행의 제1 주주끼리 혹시 서로 짜고서 교차대출을 해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것을 막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가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대주주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고 산업자본이 은행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그 제도적인 장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현행법에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 대주주 간의 거래를 반드시 보고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지분비율 규제를 저희가 완화하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

를 더 불식하기 위해서 만일 산업자본이 4%를 초과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 자체를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법에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대주주가 무슨 다른 회사 출자를 위한 신용공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 이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통제 장치를 그렇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 지금 세간에서는 이 은행 지분 10%로 완화하는 것이 마치 은행의 주인을 찾아 주는 것처럼, 마치 그 소유자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게 알려진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0%가 지배적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은행의 주인 찾아 주기로 알려진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자본이 충분히 형성 안 돼 있기 때문에 금융 이외의 영역에 있는 자본들을 좀 활용해서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하고 그렇게 활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고승덕 의원** 이번 추경예산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현금출자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3000억 반영돼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 만약에 그 금액만큼 자본금이 늘어난다면 기업은행의 BIS비율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한 0.28%가 늘어서 거의 12%에 육박하게 됩니다.

○**고승덕 의원** 이번에는 금융안정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금융안정기금, 지금 규모가 나와 있지 않은데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융안정기금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보완하면서 은행의 대출여력을 확보해 가지고 실물 쪽으로 자금을 좀 더 많이 흐르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의 재무건전성 측면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고 또 현재 저희가 시장에서 조성해 가지고 운영 중인 자본확충펀드도 다 아직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확충펀드의 소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추후에 조성규모를 결정하고 이번에는 입법에서 근거만 마련하

는 것을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 금융안정기금은 어느 기관에서 맡아 운용할 예정입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새로 만든 정책금융공사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고승덕 의원** 외환위기 당시에 금융안정 기능은 예금보험공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정책금융공사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지도 않은 정책금융공사가 금융안정기금의 운용을 맡게 된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예금보험공사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졌을 때 그 부실 기관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강제로 투입해서 금융기관 시스템을 갖다가 빨리 복구하는 그런 전통적인 장치입니다.

그런데 금융안정기금이라는 것은 그런 전통적인 장치가 아니고 실물 여력도 확보하면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의 기능으로 볼 때 예보는 좀 적합치가 않고 새로 만드는 정책금융공사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승덕 의원** 이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아니, 정책금융공사법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됐습니다.

○**고승덕 의원** 아니,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고승덕 의원** 당정 협의라고 하는 것이 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하는 게 당정 협의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그렇습니다.

○**고승덕 의원** 그런데 4월 1일 날 법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한참 지나와가지고 당정 협의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당정 협의가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싸구려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구나 정책금융공사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아직 동의해 주지도 않은 그러한 관련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은법 개정안도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렇게 태어나지도 않고 이런 기관에다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채무보증을 한 그러한 막대한 자산을 맡기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면서도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 이제 언론에만 흘리는 것은 이걸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정책금융공사는 지난번 2월 국회에서 그 근거 법률이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설립준비단도 그 법률에서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설립준비단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 이번에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 기금이 설치가 됩니다. 운용기간이 5년이라고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틈타서 여러 가지 입법이 되고 있는 중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한시적인데요.

외환위기 당시 설치했던 기금들은 한시적으로 운용이 됐고, 또 미국에서도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채무보증을 해 주는데 보증기간은 2012년도 6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금융안정기금은 마치 경제위기를 틈타서 나온 기금인 것처럼 위장을 하면서 왜 종료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운용하려고 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 그 금융기관을 이런 위기 시에 지원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실채권 정리를 신속하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생긴 금융기관의 부족자본을 갖다가 보충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실채권 정리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해서 빨리 그것을 신속히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시한을 두는 것이고요. 이 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옛날 예금보험공사 투입했을 때도 경험했듯이 이것을 일찍 시한을 잡게 되면 그 매각시한의 부담 때문에 그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는 게 여의치가 않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투입하는, 자본을 투입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배당금도 회수하고 시장에서 매각하는 그런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고승덕 의원** 이번에 금융안정기금의 투입요건은 기존 정책금융공사법과도 배치가 됩니다.

정책금융공사를 만들 때 뭐라 그랬냐 하면 기존에 있는 대기업 정책금융은 이제 줄업을 하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대출 정책금융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거기다가 양념으로 긴급한 금융시장 안정 업무를 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정책금융공사법 21조에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금융공사는 빨라야 6월에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긴급한 그런 요건이 빠진 일반적인 경우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융위기가 긴급한 거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왜 기존 기관을 놔두고 6월에 만들어질 기관에 그 업무를 맡깁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 안정을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고요. 이번에 정책금융공사가 안정기금을 운용하게 한 것은 정책금융공사법의 목적에 나와 있듯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부합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관련법인 금산법을 고치면서 같이 거기에다 설립 근거를 만든 겁니다.

○**고승덕 의원** 금융위원회가 기금을 감독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따리가 커지기 때문에 영향력을 확대해서 좋고, 정책금융공사는 이것을 빙자해서 조직을 키울 수 있어서 좋고, 금융회사들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보증한 돈을 싹짓돈처럼 언제든지 빼 쓸 수 있다고 해서 금융권만 굉장히 좋은 일 생겼다 이런 지적들이 세간에 많습니다.

정책금융공사의 고유사업으로 긴급한 경우 금융시장 안정자금을 공급할 수 있지만 긴급한 경우 금융시장 안정자금 공급은 이 공사의 자본금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자본금으로 자금을 최대한 공급해 보고 모자랄 때라든가 긴급한 경우에만 국회에다 손을 벌려야지 아직 자기자본금으로 일도 시작하지 않은 정책금융공사에 별도 기금부터 보따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니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정책금융공사의 자본금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이번에 안정기금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 다른 나라들이 대개 다 이런 방식의 자금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저희가 전통적인,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을 강제 투입하기 전

에 이러한 실물 지원과 자본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좀 더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그런 기금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승덕 의원** 이번 금융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금융권에는 막대한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손 벌린 것만 보더라도 자본확충펀드 20조, 구조조정기금 40조, 1000억 달러 외화지급보증, 게다가 여러 가지 것을 다 따져 본다면 100조가 넘습니다. 지난번에 은행채도 수신회를 한국은행에서 사 줬는데요, 금융권에 들인 지원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대합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자동차산업을 위해서 폐차 보조금을 발의했을 때 1년에 1500억 정도밖에 들지 않으면서도 10배 이상 효과가 나고 또 세수도 3000억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이렇게 효과 법안에 대해서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자구노력을 강도 있게 요구하면서 1년에 1500억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 동안에 100조 이상을 퍼붓고 있는 금융권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금융권의 자구노력을 감독하고 촉구해서 성사된 실질적인 사례들을 한번 열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진동수** 금융권에 대해서 작년,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화지급보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MOU를 맺어서 은행의 임원이나 임원의 보수 같은 것을 삭감하고 외화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 대출도 연간 50조 원 정도를 하면서 그 실적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자체적인 자본 확충 노력을 작년 하반기에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고승덕 의원** 국민이 생각할 때는 그 자구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100조 이상 자금 투입 그리고 1000억 달러 이상의 보증 지원에 대한 것에는 현저하게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덕 의원** 금융위원장께 대한 질문을 마치

고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감사합니다.

○고승덕 의원 요즘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이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습니다.

○고승덕 의원 아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막는 가장 큰 장애는 보육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 기업인들을 만나 봤더니 여성 인력을 유치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직장 내 보육시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규제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총리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장 내 보육시설은 몇 층 이하에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사업장 내는 3층까지 하고요, 일반 보육시설은 1층밖에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1층에 설치하고 2·3층은 또 예외적으로 설치하고 또 그 위층은 설치를 못 하게 돼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장 비싼 1층에만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을 만들고 있느냐?’.

총리님께서서는 왜 층수 제한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 이 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유아고 하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대피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 요즘 대한민국 소방법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좀 엄격한 법 중의 하나다, 아직도 규제가 완화 안 됐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저는 여성의 경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완 대책은 필요하겠지만 큰 방향은 보육시설에 대한 층수 제한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여성 인력들이 이제 경제 일선에 진출하는 수가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이고 여성의 경제 진출이 주로 보육시설 미비 때

문에 제약을 받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아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최근에 반가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휴대폰 시장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미국 시장에서 팔린 휴대폰 2대 중 1대는 한국 제품이고 서유럽에서 판매된 휴대폰 3대 중 1대는 역시 한국 제품입니다.

저는 이런 성과가 힘들게 연구하고 디자인하는 젊은이들 또 글로벌 마케팅 시장에서 치열하게 영업하는 젊은 직장인들의 노고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시련을 겪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이 살아나는 경제, 중소기업이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나간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제2의 도약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고승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구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을인 홍장표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서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강길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울산 울주 출신 강길부 의원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었던 시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전쟁으로, IMF 외환위기와 카드 대란에, 이제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만드는 특별한 기질과 근성이 있기에 이번에도 반드시 우리는 다시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승수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 건설 등 청정 수원 확보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촌 곳곳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1283mm로서 세계 평균인 970mm 이상이지만 지역적으로나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편중됨으로써 수자원 관리는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도산업사회에서는 비료나 농약으로 인한 농업오수, 생활오수, 공장폐수 등이 유입되는 하천에서 먹는 식수를 직접 취수하여 처리하는 것은 다이옥신과 같은 오염물질로 인해서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청정 수자원 개발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생명의 자원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동의합니다.

○강길부 의원 금년 들어 우리나라 남부지방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80년 만의 가뭄으로 주민들은 극심한 식수난과 용수난을 겪었습니다. 멀지 않아 124년 주기의 대가뭄이 올 것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자원 개발의 방향은 치수·이수를 목적으로 다목적댐을 건설해서 홍수 피해를 막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하며 수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남한강 본류에 동강댐 건설을 무산시킨 예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여름 홍수기에 충주댐은 아무리 댐을 매뉴얼대로 잘 운영한다 하더라도 홍수조절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충주댐 하류인 여주지역의 하천 제방 월류를 막아서 침수를 방지하고자 노력한 결과 댐 상류지역인 단양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태백 등 강원지역의 가뭄을 보더라도 주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수원 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충주댐 상류지역의 홍수조절 용량과 강원지역의 용수원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남한강 수계에 댐

건설을 다시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존경하는 강길부 의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강수량은 충분히 있으면서도 이것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로 이렇게 유엔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와 같은 다목적댐, 적어도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큰 것은 아니더라도 중소 다목적댐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 문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길부 의원 북한강 수계는 소양강댐을 비롯해서 춘천댐, 의암댐, 팔당댐, 이런 한 7개의 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운영하면 홍수통제가 되는데 남한강 수계는 대청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단양이 물에 잠기느냐 여주가 물에 잠기느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댐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북한강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인구도 적고 하기 때문에 소양댐이라든가 춘천댐이라든가 파라호라든가 큰 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남한강의 경우는 그와 같은 대규모의 댐을 만들기는 대청댐 이외에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을 제대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역시 조그마한 댐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물을 보전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길부 의원 필요한 수자원을 확보해서 여러 지역에 고루고루 물을 분배하는 것은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의 문제인 동시에 필요 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특정 지자체의 단위로는 지역 내 댐의 적지가 부족하고 신규 댐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마찰, 지자체의 재정 능력의 부족, 그리고 건설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볼 때 사실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습니다.

○강길부 의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때로는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때로는 국경을 건너 흐릅니다. 물은 우리 모두의 공유 자원이지만 특정 지역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생명의 물이 지역 이기주의의 수단이 되거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이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물 문제로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라도 주민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목적댐이 주민들에게 더 이상 기피시설이 아니라 우리가 저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의 사례에서 보는 것을 참고해서 입지 반대가 아닌 댐 유치에 호의적일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강길부 의원 필요한 지역에 새로운 댐을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설치된 다목적댐으로 확보하고 있는 청정수자원을 함께 나누어 쓰는 지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천은 수계별, 유역별로 그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낙동강 남부유역권에 건설된 대표적인 다목적댐은 밀양댐, 남강댐, 합천댐입니다.

현재 경남, 부산, 울산이 제기하고 있는 낙동강 남부유역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이들 다목적댐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동의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역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순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기초단체장들도 그렇고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인 입장에서 해결에 적극 나서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지난 96년 정부에서 합천댐 물을 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것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합천댐의 물을 황강에서 취수하면 1일 100만t의 깨끗한 물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역상수도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합천댐 주민의 반대와 낙동강 본류의 수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은 합천댐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의 댐에서 안정적으로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면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반

대는 어느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96년 합천댐이 건설된 후에, 그 뒤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9년에 제정이 되었고, 또 수도법상 주민 지원사업을 1996년부터 시작한 점을 감안해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최소화하면서 법에 따라 충분한 보상과 지원대책을 강구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천댐의 물을 송수관로로 부산, 울산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옛말에 “치산치수가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원으로서의 물에 관해서 이러한 지자체 간 다툼을 국가 어젠다 차원에서 국무총리께서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정해서…… 깨끗한 물을 놔두고 왜 활용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다음은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낙성 의원께서도 개별입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연접개발 제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난개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은 일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연접개발제한제도 때문에 지금 소규모로 난개발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길부 의원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댐 수도계획법, 이런 소관 부처에 따라서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 등 총리실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그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든가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연접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의원** 그런데 국토이용의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질서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입주업체도 편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동의합니다.

○**강길부 의원** 그래서 계획적 국토 관리의 틀을 제대로 만들고 그에 따른 개발 기준과 절차, 지침을 주어서 일선 행정 실무자가 난개발이 아니고 그 매뉴얼 보면 질서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이 분야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강길부 의원님이 사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총리가 답변할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 그대로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다음은 도시계획 전문가 공직 취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은 물론 최근에는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토목·건축·행정 분야의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유비쿼터스 기술에 의한 U-city 기반의 도시 공간 정보 체계의 구축 등 한층 더 고도화된 기법의 활용과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행정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직은 1993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서 신설은 되었는데 5급 도시계획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은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자체별로 7급 내지 9급 공무원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총리께서 이 도시계획 수요를 좀 잘 파악을 해서 전문가를 확보하는 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기자재들이 많이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도시계획에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와 관

련된 공무원들의 질도 많이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중앙도 그렇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가 보면 더욱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강길부 의원** 꼭 전문가가 많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강길부 의원** 다음은 건축문화 개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건축물도 국가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은 마치 한 사람이 디자인한 듯한 성냥갑 아파트의 나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 참 이렇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총리님은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사실 지금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개발 초기에는 건축의 아름다움보다는 역시 생활공간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파트가 동일한 형태의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서 건축미가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길부 의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축사가 자기가 건축해 놓고 “이거는 흉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한심했는데요, 시공업체가 시키는 대로 자기는 돈 주는 만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시정돼야 안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정을 하기 위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라의 주택 건설 현황과,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싱가포르를 대비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똑같은 건물 하나도 짓지 못하도록 하고 했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거의 복사판으로 건설되는 과정에서 사실 건축미를 많이 잃어버린 그런 도시를 많이 생성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강길부 의원** 그래서 2007년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건축 디자인 기준 설정이라든지 국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거든요. 현재 추진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디자인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알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농식품부장관입니다.

○강길부 **의원** 반갑습니다.

농업이 우리나라가 선진 강국으로 가는 승부처가 아니냐, 미국·프랑스·캐나다와 같은 농업 강국이 모두 선진국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그렇습니다.

○강길부 **의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S. 쿠즈네츠가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이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길부 **의원** 향후 10년간 세계 농업구조는 지난 반세기 걸쳐 변화해 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귀중하게 여기고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짓는 농지에 눈 안 있습니까? 식량 생산 이외에도 생물 다양성 유지라든지 홍수 조절, 대기 정화, 공동체 유지, 전통 문화 계승, 정서 함양 같은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농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그렇습니다.

○강길부 **의원** 겨울철 휴경지를 이용한 조사료를 재배하는 이모작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화면 영상자료를 한번 보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휴경 상태에 있는 논입니다.

이것은 퇴비를 살포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논입니다.

이것은 액체비료를 살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파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홍수조절지를 많이……

이것은 저희 지역에 많은 한우를 이렇게 방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모작은 경작농지의 이용 효율성 극대화라든지 농한기 토지 임대 수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경쟁시키듯이 정부가 좀 도와줘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종자 공급의 문제입니다.

현재 목초 및 사료작물의 연간 필요 종자량이 4798t이지만 한 98.7%가 수입종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량 품질 종자 육성과 종자 공급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지적하신 대로 종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외국에서 대부분 종자를 들여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료 부분의 종자를 가급적 국산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2년까지는 한 15개 품종 정도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의원** 그런데 당장 보리를 안 갈고 있는 사람에게 보리 갈라고 하면 종자를 도와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대책은 없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그런 지원 여러 가지…… 청보리 공급을 하면 청보리 재배 종자 공급 그리고 수확하는 기계 구입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의원** 두 번째는 조사료 재배를 하기 위해서 트랙터라든지 액비 분사기, 사일리지 등과 같은 고가의 장비가 필수적인데 개개인이 이러한 장비 구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농·축협을 통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도 축협이나 농협에서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데 처음에는 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그래서 그런 경영체들이 기계장비 구입할 때 작년도에는 60%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8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하는 데도 지원 비율을 높이고요.

또 경관을 위한 그런 직불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활용해서 조사료 자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강길부 의원 그다음에 조사료 유통의 문제인데, 수확철에 1~2개월에 집중해서 수확이 되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1년 동안 사용해야 할 조사료를 일시에 구매한다는 구매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이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통 물량이 지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사료 구입비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60년대 중반에 경남 이계순 지사가 ‘보리 배 증산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성공해서 농림부장관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농사 지으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름만 좀 잘 주고 분노만 잘 주면 배 증산이 충분히 된다고 그렇게 봤거든요. 이번에 이것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 국토에 유희농지가 없어요. 왜 옛날에 다 이모작을 했는데 요새는 보리 안 갈고 일모작만 한다는 것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 농민이 다 스스로 보리를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것은 인센티브제도 있고 페널티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전 국토가…… 보기에 안 좋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강길부 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강길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 출신 민주당 주승용 의원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우리 경제는 계속 불황의 연속입니다. 언제 회복될지 누구도, 아무도 예측 못 하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대책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는 지적이 많음에도 정부는 검토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저 세계적인 경제위기 탓만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작년 1년 저소득층의 적자가구는 증가했고 고소득층의 적자가구는 감소했습니다. 경제난 때문에 국민 모두가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고소득층은 좀 나아지고 저소득층만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심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경제위기로 자산 소득이 없는, 특히 저소득층의 살림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성장이나 고용 부진 등 경제 침체에 주로 기인한다고 보고요,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승용 의원 문제는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어려워야 되는데.

금년 예산은 당초 경제성장률을 4%로 예상하고 편성한 것인데, 올해 들어 와서 -2%로 변경했고 이에 맞춰서 이번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은 작년 2월 퇴임 직전에 “지난해 이미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금년도 마이너스 성장을 알면서도 작년에 4%에 준하는 예산편성을 했다면 국회와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좀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마 작년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그 11월 달에는……

○주승용 의원 알고도 편성했다면……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 당시 정부가 4%내외 성장을 아마 전제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IMF를 비롯해서 다른 경제 예측 기관들도 그 언저리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

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셨다는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답변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의원** 추경을 본예산 때 예측을 잘못해서 불과 한두 달 만에 너무 빨리 그리고 빚으로 너무 많이 편성했다는 지적은, 이유야 어쨌든간에 예산당국의 예측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시인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6개월 간에, IMF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세계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할 만큼 경기의 불확실성이 매우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단히 당혹케하고 있고 한 점을 감안하면, 물론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그러한 경제 전망이 더 정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는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주승용 의원** 슈퍼추경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빚더미 추경입니다. 전체 29조 중에서 22조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을 나머지 국민들이 갚는 그런 구조입니다.

감세정책이 재정 적자를 더욱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시기를 연기했으면 좋겠다,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고집만 부릴 게 아니라 좀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감세정책은 되풀이됩니다. 마는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그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의 기여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데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런 제도를 변경하면 정책의 일관성 문제, 대외신인도의 추락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승용 의원** 저, 크게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주승용 의원** 일자리 창출이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렇습니다.

○**주승용 의원** 지금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고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공공기관은 감축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작년 12월에 1만 9380명, 금년 3월에 2981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공기업 선진화는, 또 그 나름대로의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의원님 아시다시피 일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이런 것이 문제가 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경영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결국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한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서 절감된 재원으로 1만 2000명 정도의 청년 인턴을 채용할 계획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또 사내복지기금이나 임직원 임금 자율반납 재원 등을 활용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을 지금 현재 약 4000명 이상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 크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죄송합니다.

○**주승용 의원** 지금 공기업 방만 경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는 좀 반대되는 것 아니냐 이 시기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면 작년에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매출액이 56조 원, 전년 대비 24%나 증가했는데 정작 일자리는 1138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재벌들이 규제 완화해 주니까 자신들의 매출과 이익은 늘리고 일자리는 감소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마 저 통계를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4/4분기는 좀 달랐을 테고요, 매출액 증가에 비해서 임직원 수 증가는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 저희들도 저것이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기업이 옛날하고 달라서 대내외 경쟁이 강력하게 일어남으로써 적절한 투자수익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은 측면은 이해를 하면서도 기업이 기업가 정

신에 빚대어서 고용 창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그런 요청과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록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등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자리를 증가시킨 데는 동참을 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승용 의원** 정부만 일자리 창출 외치지 말고 기업들에게도 촉구해 주시고요.

경제가 급변하는 1, 2개월 후에 또 추경하실 겁니까? 상황이 된다면?

○**기획재정부장관 윤종현** 지금은 아직, 지금 제출되어 있는 추경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문제는 아직 논의하는 것이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승용 의원** 경제가 급변하면……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작년 8월에 기숙형 공립학교 82개를 선정 발표했는데 그 선정 기준과 목적이 뭐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기숙형 공립학교는 농산어촌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 지역의 낙후된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건 이런 것을 좀 개선하고 오히려 도시 쪽에서 농촌으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압니다.

○**주승용 의원**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도농 통합 도시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불이익보다 작년에는 그게 고려되지 않았고 금년에 할 때는 도농 복합도시라고 해도 그 여건이 아주 열악한 지역은 해 주려고 합니다.

○**주승용 의원**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작년에 왜 안 됐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작년에는 농산어촌 중심으로 했습니다.

○**주승용 의원**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도농 통합 도시는 인센티브는 주지 못할망정 불이익을 겪어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행정부의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지 몇 년도 안됐는데 시가 됐다고 해서 도농 통합 도시에 대해서는 기숙형 공립고를 안 준다는 것은

정부가 너무 업무 파악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래서 금년에는 거길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 금년에 몇 개 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금년에 전부 150개인데 그게 금년에 68개가 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도농 통합도시에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좀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어제 우리 당 의원님께서 이번 추경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또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라면서 유감표명을 요구하셨는데 총리께서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취임 초기 총리님의 겸손함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정부에서도 제가 그런 것을 느꼈는데 총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더 겸손하심이 국민들이 보기에나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감사합니다.

○**주승용 의원** 총리께서 작년 12월 4대 강 정비사업 기공식을 오전에는 경북 안동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전남 나주에서 하루 두 차례나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랬습니다.

○**주승용 의원** 아직 4대 강 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작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도 안 되어 있고 또 공사 입찰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공회사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기공식이 가능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기본적으로 정부는 4대 강 살리기는 녹색뉴딜정책의 기본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빠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사업지구는 선정을 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동, 나주 그 뒤에 대구, 충주까지 다녀왔습니다, 부산까지. 앞으로 함평, 연기 등……이 지역이 제일 선도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비교적 준비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다녀왔고 기공식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플랜이 아마 곧 나오

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 심지어 사전환경성 검토도 경북 안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사전환경성 검토는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환경성 검토도 안 되고 마스터플랜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공식만 구태여 하는 이유가 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도 나주도 가보고 안동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 주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선도사업지구로서 선정되고 착공을 하더라도 곧이어서 환경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이 일자리 만들기에 좋고 하기 때문에 추진을 했고 그와 같은 추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의원** 작년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가 4대 강 정비사업의 실체는 대운하사업이다 양심선언을 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 그 당시 건기연은 징계하지는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 원장이 취임한 뒤 12월에 갑자기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유는 연구원의 위상을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공식 입장이 이렇게 수시로 바뀐다?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그것은 연구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총리로서 언급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인사는 원장이 아마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 최근에 건설기술연구원의 조용주 원장의 박사학위논문이 표절되었다는 의혹 보도 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들어 알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2003년도와 2006년도에 2개의 연구보고서를 한양공대의 서영찬 교수에게 연구책임자로 의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논문은 조용주 원장이 2006년도에 제출한 박사논문입니다. 서영찬 교수의 보고서를 거의 그대로 베끼는 수준입니

다. 조용주 원장은 서영찬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서 다시 서영찬 교수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은 것입니다. 지도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가지고 학생이 박사학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있을 수가 물론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학위논문 표절 여부는 지금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조사 후에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예, 진상조사 하십시오.

김이태 박사가 양심선언으로 중징계 당했다면 논문을 베낀 조용주 원장은 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4대 강 정비사업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

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4대 강 중에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수 구간은 고작 2.1%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4대 강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 대운하를 위한 사전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수 방지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란데 홍수 방지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란데 4대 강보다는 수십mm 비만 와도 그대로 침수되어 버리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여기에 신경을 쓰고, 또 4대 강은 주로 중장비가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거의 인력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4대 강 정비사업은 이제 2%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좀 많이 예산을 투입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대 강 살리기가 국가하천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하천도 정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방하천 정비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주승용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좋을 것이 지방하천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이번 추경만 보면 국가하천 정비사업이 3500억이고 지방하천 재해 예방사업이 2000억밖에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2배 이상 더 많아져야 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로서는 지방하천도 중요

하기 때문에 국가하천 못지않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4대 강 정비사업을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추진하라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그런 뜻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승용 의원**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추진하라…… 이번 기회에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될 때에는 정말로 4대 강을 다시 살려서 여러 가지 기능을 회복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들어가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 주공·토공 통합법안이 최근 국토해양위에서 날치기 의결되었습니다. 주공·토공의 통합 문제는 수년 동안 여러 곳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통합에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도 지금까지는 계속 통합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MB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통합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전형적인 무소신 그런 태도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간략히 경과를 조금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승용 의원** 예.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사실은 이게, 주공·토공 통합 문제가 93년 이후에 10년 이상 된 이슈입니다. 사실 초기에는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해관계 집단들의 반대로 인해서 좀 좌절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통합을 하지 말고 기능 조정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이후에 기능이 더 커지고 중복 업무가 많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문제는 기능 조정 가지고는 안 되고 통합을 통해서 제대로 회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주승용 의원** 통합을 하게 되면 자본금이 얼마나 되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자본금이야 배로 늘어 납니다만 그 자본금이라는 것이 무슨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바로 이런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승용 의원** 저는 토공·주공 따로따로 해도 지금 거대한 공룡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개의 기업을 합치는 것은…… 지금까지 스스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용역 결과마다 통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까지도 국토해양부는 반대해 왔습니다.

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느냐 이겁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주공·토공의 기능을 그대로 두고 통합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새시대에 맞게 이 두 기관이 하고 있는 기능을 어떻게 공적 기능에 맞게 정비하면서 이 회사를 가져갈 것이냐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단순히 합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건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회사가 꼭 해야 될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면서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승용 의원** 선도프로젝트가 뭐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히 선정해서 하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주승용 의원** 영남은 10개, 호남은 5개가 발표되었지요, 총 30개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갯수로는 그렇습니다.

○**주승용 의원** 제가 타당성조사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인가를 분류를 해 봤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남은 10개 중에서 7개가 신규사업이고 사업비가 19조 3000억입니다. 반면에 호남은 5개 중 겨우 2개가 신규사업이고 사업비가 1조 5000억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보는 관점에

따라 자료가 정리됐습니다만 제가 정리한 자료는 의원님께서 가진 자료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적인 것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나를 기준으로 해서 봤지 절대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주승용 의원 제가 타당성조사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분류한 것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물론 신규사업이나 지정된 사업이나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봤을 때 영남·호남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주승용 의원 왜 이렇게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것은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호남고속철도가 선도프로젝트에서 빠졌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아닙니다. 들어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 빠지고 광주-나주-화순 순환철도가 들어갔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호남고속철도는 분명히 선도프로젝트의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입니다.

○주승용 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까지 완공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게 지켜지지 않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능한 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조기에 하기 위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광주까지는 201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 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 광주까지 2014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주승용 의원 그러니까 2012년은 안 지켜지는 거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2012년은 사실상 물리

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주승용 의원 호남고속철도를 제주까지 연장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이윤석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이 사업이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한 15조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고요, 또 바다의 먼 길을 해저로 건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승용 의원 저는 호남고속철도만을 목포까지만을 놓고 생각했을 때는 경제성이 안 맞지만 목포에서 제주까지 연장했을 때는 그 경제성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연구원에서 BCB가 1.0 이상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시고요.

지금 선벨트 사업 용역을 하고 계시지요, 국토연구원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주승용 의원 반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어쨌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경제성 같은 것을 한번 좀 잘 따져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교통연구원 분석 결과 BCB가 1.0 이상 나오고 충분히 1년 이상 검토가 된 사항인데, 지난번에 또 언론에 발표가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호남고속철을 안 한 것이 경제성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교통연구원의 발표 결과 이것을 제주까지 연장했을 때는 그 경제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발표했으면 적극 검토하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어쨌든 이 교통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를 면밀히 검증하면서 필요성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다시 좀 나오십시오.

현재 농어촌에 1876명의 보건진료원이 전국 벽지·오지·낙도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80%가 15년 이상의 경력자입니다. 벽지에서 오지에서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셨습니다만 신분 불안합니다. 별정직입니다. 내일이라도 시장·군수가 그만두라면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자는 일반적으로 좀 전환해 줘야 된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진료원은 직무의 전문성이나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고려해서 별정직으로 임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부처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를 토대로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의 안정감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비정규직도 2년이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마당에 수십 년 동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면서도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답변이 너무 작으신 것 같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려워 민자사업으로 계획된 사업마저도 추진이 극히 부진합니다. 그 필수시설인 수족관 시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민간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수박람회를 유치하고 난 뒤에 2012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성공적으로 치르려고 생각합니다. 마는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민간투자자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2012년 여수박람회가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승용 의원** 아니, 민간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수족관 같은 것은 필수시설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썬요, 그것은 정부 지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원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반드시 그와 같은 필요한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간을 통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승용 의원** 정부 지원위원회에 각 부처가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주승용 의원**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부처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박람회장 주변의 전선지중화사업, 이것은 한전을 관할하고 있는 지경부가 한다든지 또 인근 해안가의 국방부 초소 철거 작업, 이것은 국방부가 해 주고 또 인근 임야의 산림녹화사업, 이런 것은 산림청이 해 주고 좀 정부 지원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 지원위원회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썬요, 지원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지원위원회가 그동안 세 번에 걸쳐 열렸기 때문에 또 근간 또 한 번 더 지원위원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수시 자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승용 의원** 아니,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물론 시가 적극 돕는 것은 맞습니다. 마는……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가 할 일도 있고 또 현장에서 할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위원회는 노력을 하겠고, 현지에서도 시의회 등이 필요한 조치, 예를 들어 토지 수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승용 의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총리님이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총리입니다.

○**주승용 의원** 좀 관심 가지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주승용 의원**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장려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년에 없던 일입니다. 금년 지방채 발행액은 작년보다 무려 58%가 증가한 3조 4563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가급적 지방의 채무 증가를 억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부는 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채 집행실적이 우수한 곳에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습니다. 빚을 많이 지면 혜택을 더 준다, 이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워 중앙에서도 적자재

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중앙에서 국채를 일으켜서 지원금을 내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특히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지방채를 일으켜서라도,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지방채를 일으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역 발전에도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 결국 지방이 갚아야 될 빚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방채는 물론 지방이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국채를 일으켜서 지방에 보내는 것하고 국민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과정에서 지방채가 너무 부담이 될 때에는 다른 방법을 중앙정부에서 시차를 두고 강구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승용 의원 현재까지 16개 시도의 누적 지방채가 12조 4000억인데 올해 그 절반 가까운 5조 3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부세……

○국무총리 한승수 그 지방채 발행한 것 중에는 중앙정부의 본래 목적인 일자리 혹은 경기 활성화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더 파악을 한 뒤에 격려를 하든가 조치를 취하든가 그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 여의도 면적 100배 이상의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로서는 불합리하게 설정된 그린벨트는 가능한 한 풀어서 합목적으로 토지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주승용 의원 불합리하게 설치된……

○국무총리 한승수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해서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서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린벨트를 처음 설정할 때,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그린벨트가 뭔지 모르고 그냥 좋은 줄 알고 굉장히 많은 중소도시들이 그린벨트를 필요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풀어서 그와 같은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이루는 것이 국민 경제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 앞으로는 그린벨트는 계속 푸실 것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러나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풀어야지 그냥 함부로 푸는 것은 아닙니다, 예.

○주승용 의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고통이 너무도 심각합니다. 서민보호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세정책과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제2롯데월드 허가와 같은 재벌 특혜, 균특법 개정을 통한 특정지역의 소외, 저탄소 녹색성장 운운하면서 그린벨트의 대폭 해제, 정말 앞뒤가 안 맞고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하는 정부가 되고 싶다면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과 서민 위주의 정책에 매진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주승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홍장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이윤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안산 상록을 출신 홍장표 의원입니다.

봄을 맞아 만물이 소생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소생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업률

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부격차는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장보기가 두렵고, 자영업자의 폐업과 중소기업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경제 위기를 타하는 동안 국민들의 가계부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여전히 추운 겨울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민소득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집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상당히 비싼 수준입니다.

○**홍장표 의원** 한남 뉴타운은 평균 분양가가 2400만 원에 달하고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가는 16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도시근로자가 109㎡, 3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내 집 마련에 20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밭 뺏고 누울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데 20년이 넘게 걸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장관께서는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정상적이 아닙니다.

○**홍장표 의원**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8.1%가 넘지만 자기주택 보유율은 55.6%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은 내 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계획을 전공한 엔지니어로서 아파트 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6년도에 분양된 판교 신도시 예를 들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판교 신도시 총 개발면적은 930만㎡고, 총 사업비가 7조 9000억이 들어 1㎡당 85만 원입니다. 따라서 판교 신도시 땅값은 3.3㎡당, 즉 1평당 282만 원이 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개발면적 전체를 분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유상면적과 무상면적이 있습니다. 도로, 광장, 녹지, 이와 같은 곳은 이미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에 기부채납하고 유상면적은 불과 40~50%가 되지 않습니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도로, 공원, 광장, 녹지, 수도, 가스 등 도시기반시

설 부지는 무상으로 성남시에 제공했습니다. 결국 나머지 40%가 토지 분양면적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의원** 전체 면적의 3.3㎡당, 1평당 220만 원에 대한 40%를 분양자가 부담을 하면 택지비는 3.3㎡, 1평당 705만 원이 실질적인 분양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는 주택건설사에 705만 원에 분양을 하지 않고 감정가로 1300만 원 이상 분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 시 용적률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홍장표 의원** 택지 분양가 705만 원에 판교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80%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으로 나누면 땅값은 391만 원입니다. 따라서 3.3㎡ 택지비는 391만 원이 분양가라는 말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계산은 그렇게 됩니다.

○**홍장표 의원** 다음은 건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주택비 상한가는 444만 원을 모두 적용하겠습니다. 택지분양비 391만 원에 건축비 444만 원을 더하면 835만 원입니다. 결국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835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실지로 판교 신도시 분양가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되는데……

○**홍장표 의원** 대략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한 1500~16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의원** 예, 맞습니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3.3㎡ 1평당 835만 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소형 아파트는 평당 1200만 원에, 중대형 아파트는 평균 160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주택공사가 제출한 근거 자료입니다.

판교 신도시 건설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입니까? 이것이 어느 정권이

만든 아파트입니까?

장관, 본 의원은 젊은 신혼부부와 무주택 국민들이 허황된 집값에 고개를 떨구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존재이며 가치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파트를 3.3㎡당, 1평당 650만 원에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3㎡당, 1평당 650만 원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 200만 원에 건축비 450만 원으로 65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택지를 개발할 때는 기존 지역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지요, 장관님? 택지를 개발할 때는 땅값이 싼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이러한 비닐벨트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에 대한 보상비와 건물의 보상비와 지장물 보상비 다 합쳐도 땅값은 100만 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의 택지개발 조성비는 기업이윤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200만 원이 바로 택지 개발비와 보상비와 주택비인 것, 땅값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50%는 유상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은 실질적으로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을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건설사에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사는 이 400만 원을 가지고 그대로 분양가에 적용하면 안 되시지요? 용적률을 적용해야 되지요. 용적률, 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200% 이하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입니다. 3종은 300% 이하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200%를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3㎡당 한 평의 가격은, 택지비는 200만 원이 적정한 가격입니다.

다음은 건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비 역시 건축 설비 전기 가스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기업이윤을 합쳐도 450만 원이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비 200만 원, 건축비 450만 원 합해 650만 원이 적정한 양질의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의원 이와 같이 3.3㎡당 650만 원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고 건설사도 아파트 700세대를 건설해 분양한다면 보통 택지를 1만 평을 분양받은, 용적률 200% 해서 700세대를 짓는다면 100억 정도의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불박이장과 고급 내장재와 그리고 지역난방이 설치되는 주부들이 원하는 희망의 아파트입니다. 저는 건설사에서 30여 년 가까이 이것을 전공해 왔습니다.

장관께서는 아파트를 3.3㎡당 650만 원에 분양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우선 의원님께서 먼저 판교 신도시 문제에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무주택 서민에게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판교 신도시는 여러 주공이라든가 토공이라든가 성남시, 경기도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라는 이게 여러 가지 개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나게 되면 적정 수준 이외에는 전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전체의 한 62%는 전부 무상 귀속되는 토지가 되고 또 거기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수원 시설이나 도로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조 6000억 정도를 이런 도로시설에 넣고 이렇게 하면 전부 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남는 개발이익이 있을 때는 그것을 다시 그 지역에 환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동안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의 가격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서의 정책은 옛날 정책과 확실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설명드린 보금자리주택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냐 해서 바로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필요 없고 비교적 그린벨트 중에서도 이미 비닐벨트로 덮여있는 그런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주택지역으로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훨씬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의원님이 제시하

신 그런 큰 맥락 속에서 금년부터 바로 무주택서민들에게 이런 아파트를 획기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장표 의원** 하여간 철저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650만 원이면 완벽한 적정한 가격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수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같은 취지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의원**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31일 종전에 말씀하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2020년까지 녹지지역 비닐벨트 내에 공동주택 40만 호를 건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본 의원의 제안대로라면 개발비용 84조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녹지벨트,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자연녹지지역의 비닐벨트 내 아파트 40만 호 건립 시 개발비용추정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해양부의 주장에 따른다면 판교 신도시는 3.3㎡당 분양가를 1350만 원으로 하여 총분양가는 165조 원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제안대로 3.3㎡당 분양가를 650만 원으로 할 경우에 총분양가는 78조 원입니다. 차액은 84조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바로 그런 취지로 지금 저희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 중에 예약분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장표 의원**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 의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판교 신도시 분양 시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근거자료입니다. 지난 2006년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 당시에 건설사들을 분양면적 152만㎡를 135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가는 6조 200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건설부가 밝힌 분양가는 835만 원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이 무려 2조 4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무려 민영아파트의 경우는 1300만 원에

서 1700만 원 그리고 85㎡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가까이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장관님.

이러한 경우인데 그런 차액을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경실련에 건교부가 제출한 자료에도 704만 원에 땅값을 분양했습니다. 2조 4000억의 막대한 폭리를 취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어쨌든 이 구체적인 숫자, 폭리를 취했느냐 하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개발이익이 얼마나 생겼느냐에 대해서 지금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오면 의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서 숫자의 차이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장표 의원** 제가 이 도시계획과 건축과 이것을 거의 20년, 제가 30년 가까이 이걸 전공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자기 업에 대해서 있지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건설교통부 관계자, 건설사 모든 사람이 그 직장에 근무를 하면 자기 직장을 보호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장관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알겠습니다.

○**홍장표 의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께서도 ‘반값 아파트.’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땅을 사서 지어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꼭 실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 의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무현 정권 당시 건교부 산하 주공과 토공이 판교 신도시 택지를 분양하는 과정에 남긴 이득금의 차액입니다. 주택용지에서 무려 5조 원, 상업용지에 2조 원 모두 7조 원의 차액을 남겼습니다. 이 역시 자료가…… 증빙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1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는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공과 토공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으나 결국 7조 원이 어디로 갔는

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이견제가 전문가로서 실제 책임을 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저히 7조 원에 대한 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의원님의 전문성을 존경하면서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홍장표 의원** 다음은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영종도와 중국 산둥반도의 용수도를 연결하는 황해 연륙교 건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한국·중국 간의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지리적 단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황해 연륙교는 물류수송비 절감과 해양레저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은 잘 아실 것입니다. 1899년 에펠탑은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에펠탑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남아 있습니다. 에펠탑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스카이라인이라면 황해 연륙교는 대한민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오션라인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대로 한국과 중국 간 육로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국 간 교류현황을 보더라도 육로 연계의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황해 연륙교 건설을 두 가지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천 영종도와 중국 산둥반도의 용수도까지의 거리는 325km입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제1안이 교량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36조 원 가량 예상됩니다. 제2안은 교량과 해저터널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공사비는 92조 원 가량이 듭니다.

다음은 타 국가와의 사업비를 비교하겠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공사비는 150조 원 가량이 듭니다. 한중 해저터널 공사비는 109조 원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황해 연륙교를 교량 방식으로 건설

할 경우에 36조 원이 들기 때문에 해저터널 공사비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하고 사업 효과가 대단합니다.

또한 해저터널 방식에 비해 황해 연륙교는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밖에 무인도를 이용하여 해상 호텔과 해상공원 그리고 야간 조명을 이용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다면 황해 연륙교는 물류 수송은 물론 해양 관광에 있어 동북아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긴 연륙교는 인천대교로서 총연장 18.2km이고 공사비는 1조 6000억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황해 연륙교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리를 놓는 사업이 아닙니다. 황해 연륙교 건설은 국운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 사업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사업을 구상하지도, 실현하지도 못 했습니다. 진시황은 이 연륙교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본 의원은 황해 연륙교 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만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제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사업의 시행을 진지하게 검토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황해 연륙교 사업을 제시하신 홍장표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동북아경제공동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교통연구원입니다마는—으로 하여금 한중 해저터널 기초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2010년 4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륙교 문제도 아울러서 연구하도록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장표 의원** 아마 이것은 경제 교류뿐만이 아니라……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아주……

○**홍장표 의원** 실질적으로 해양에 대한 상당한…… 세계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럴 뿐만 아니라 세계……

○**홍장표 의원** 야간 경관에 의해서도 에펠탑 이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니까 적극적인, 총리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이것은 정말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명물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실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홍장표 의원** 다음 국토해양부장관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안산 전철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잇는 신안산 전철과 제2공항철도의 전철 건설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서, 신안산 전철은 ‘여의도-광명역-목감-석수골-화성’으로, 제2공항전철은 ‘인천-광명역-판교-여주’로 건설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은 안산시민과 시흥시민의 생활 패턴과 유동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강행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신안산 전철과 제2공항전철은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노선으로 결정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신안산 전철은 ‘여의도-광명역-목감-수암-중앙-테크노파크-화성’으로, 제2공항전철은 ‘논현-월곶-시흥시청-목감-광명역-인덕원-판교-여주’로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야 안산시민과 시흥시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과 같이 신안산 전철은 사업성이 충분한 황금노선입니다. 만일 국가예산이 부족하다면 BTL 사업이나 BTO 사업으로 민간 민자유치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의원님 사실은 원래 저희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한 신안산 노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역별 이해관계가 달라서 안산과 시흥 쪽의 의견이 다르고, 또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웠을 당시보다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전문가에 맡겨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안을 마련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저 안도 함께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노선 대안을 만들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의원**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감사합니다.

○**홍장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을 시작하면서 실업률과 양극화, 폐업과 도산으로 인해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이 활짝 핀 지금도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추운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다양한 제안들이 정부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국민들에게 따뜻한 봄 햇살로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지난해 4월 9일 날 저희들이 총선을 치렀습니다. 18대 국회에 오신 모든 의원님들, 아주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주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윤성** 홍장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장표 의원님의 지역구는 안산인데 한창 공부하실 때 인천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이 큼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 의원(260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운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진	권택기	김광립

김동성	김성곤	김성조	김소남	김영진	김우남	김재경	김정훈	김충환	김학용	나경원	노철래	문희상	박민식	박상은	박순자	박종희	박진	백원우	서갑원	서청원	송광호	신낙균	신지호	안규백	안홍준	여상규	유원철	유기준	유원일	이경재	이명규	이병석	이애주	이용희	이인기	이종걸	이진삼	이학재	이혜훈	임두성	장세환	전현희																		
김부겸	김성수	김성태	김영록	김옥이	김유정	김재균	김종률	김태원	김형오	나성린	류근찬	박근혜	박병석	박상천	박영선	박주선	배영식	백재현	서병수	성윤환	송민순	신상진	신학용	안민석	안효대	오제세	원혜영	유선호	유일호	윤상현	이계진	이미경	이사철	이영애	이윤석	이인제	이종구	이철우	이한구	이화수	임영호	장윤석	전혜숙																	
김상희	김성순	김성회	김영선	김용구	김을동	김재윤	김춘진	김태환	김효재	남경필	문국현	박기춘	박보환	박선숙	박은수	박준선	배은희	변웅전	서상기	손범규	송영길	신성범	심재철	안상수	양승조	우윤근	원희룡	유성엽	유재중	윤석용	이낙연	이범관	이성남	이용경	이윤성	이정선	이주영	이춘석	이한성	이희창	임해규	장제원	정갑윤																	
김선동	김성식	김세연	김영우	김용태	김장수	김정권	김충조	김학송	김희철	노영민	문학진	박대해	박상돈	박선영	박종근	박지원	백성운	변재일	서종표	손숙미	송훈석	신영수	안경률	양정례	우제창	원희목	유승민	유정복	이강래	이두아	이시종	이용섭	이은재	이정현	이진복	이춘식	이해봉	임동규	장광근	전병헌	정몽준																			
정미경	정영희	정진석	정해결	조배숙	조윤선	조진형	주호영	천정배	최규식	추미애	허천	홍일표	홍준표	강성천	김기현	김성순	김옥이	김재균	김태원	문희상	박보환	배영식	서상기	신성범	안홍준	유재중	이경재	이성남	이정현	이한구	임두성	정미경	정진석	조전혁	최경환	홍사덕	황진하	정병국	정옥임	정태근	조경태	조영택	조정식	주광덕	진수희	최구식	최병국	최재성	허범도	현경병	홍재형	황우여								
정병국	정옥임	정진섭	정희수	조순형	조전혁	조해진	진성호	최경환	최문순	한선교	허태열	홍장표	황영철	고홍길	김상희	김성식	김용태	김정권	김형오	박근혜	박상은	배은희	서종표	신지호	안효대	유정복	이명규	이애주	이진복	이해봉	장윤석	정양석	정하균	조해진	최연희	홍준표	정세균	정의화	정하균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주승용	차명진	최규성	최연희	최철국	허원제	홍사덕	홍정욱	황진하									
정양석	정장선	정하균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주승용	차명진	최규성	최연희	최철국	허원제	홍사덕	홍정욱	황진하	김광림	김성곤	김소남	김재경	김충환	노철래	박병석	박지원	서병수	신상진	심재철	유일호	윤석용	이범래	이은재	이학재	이화수	정갑윤	정장선	조순형	주호영	허천	황우여	김광림	김성곤	김소남	김재경	김충환	노철래	박병석	박지원	서병수	신상진	심재철	유일호	윤석용	이범래	이은재	이학재	이화수	정갑윤	정장선	조순형	주호영	허천	황우여

○개외 시 재석 의원(93인)

강성천	김기현	김성순	김옥이	김재균	김태원	문희상	박보환	배영식	서상기	신성범	안홍준	유재중	이경재	이성남	이정현	이한구	임두성	정미경	정진석	조전혁	최경환	홍사덕	황진하
고홍길	김상희	김성식	김용태	김정권	김형오	박근혜	박상은	배은희	서종표	신지호	안효대	유정복	이명규	이애주	이진복	이해봉	장윤석	정양석	정하균	조해진	최연희	홍준표	황영철
권영진	김선동	김성조	김장수	김충조	나성린	박대해	박종희	백원우	송광호	신학용	원유철	유정현	이범관	이윤성	이춘식	이혜훈	전현희	정옥임	조배숙	주승용	최영희	황우여	
김광림	김성곤	김소남	김재경	김충환	노철래	박병석	박지원	서병수	신상진	심재철	유일호	윤석용	이범래	이은재	이학재	이화수	정갑윤	정장선	조순형	주호영	허천	황우여	

○속개 시 재석 의원(60인)

강기정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운태	고홍길	권경석	김광림
김기현	김동성	김부겸	김성식
김성조	김영우	김용구	김유정

김 장 수 김 재 윤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학 송 김 형 오 남 경 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순 자 박 종 근 배 영 식
 백 재 현 서 병 수 손 숙 미 송 영 길
 신 성 범 안 규 백 양 승 조 원 유 철
 유 일 호 이 경 재 이 두 아 이 명 규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진 복
 이 화 수 임 동 규 임 두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길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최 영 희
 허 범 도 허 원 제 허 천 홍 정 욱

○산회 시 재석 의원(47인)

강 길 부 강 명 순 권 경 석 김 금 래
 김 부 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충 조 김 태 원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지 원 배 영 식 서 병 수
 서 종 표 송 민 순 안 경 릉 양 승 조
 유 일 호 이 낙 연 이 미 경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진 복
 이 춘 석 이 한 성 이 해 봉 장 세 환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규 성 최 연 희 허 천
 홍 사 덕 홍 장 표 황 영 철

○출장 의원(4인)

김 효 석 박 영 아 이 재 선 진 영

○청가 의원(14인)

권 영 세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창 수
 심 대 평 윤 영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성 현 이 용 삼 임 태 희 전 여 욱
 정 두 언 홍 희 덕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박 계 동
 입 법 차 장 안 병 욱
 의 사 국 장 이 중 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윤 증 현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안 병 만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장 관 장 태 평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이 윤 호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정 중 환

○출석 정부위원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민 승 규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 채 민
 공정거래위원회장 서 동 원
 부 위 원 장
 금융위원장 진 동 수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일자리창출및중소기업 경쟁력강화특별	문국현	선진과 창조의모임	2009. 4. 8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 특별	정태근	정양석	한나라당	2009. 4. 8

○의안 제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절차법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

(2009. 4. 8 송민순·강창일·김성곤·김세연·
 김영진·김우남·김재윤·박은수·변재일·
 송영길·송훈석·안민석·양승조·양정례·
 우윤근·우제창·이미경·이용섭·이윤석·
 장세환·전혜숙·조영택·최인기·홍장표 의원
 발의)

4월 9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9. 4. 8 강창일·양승조·김춘진·김우남·
 이낙연·김재윤·유성엽·송민순·김충조·
 김상희·홍재형 의원 발의)

4월 9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
 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른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2009. 4. 8 권택기·고승덕·현경병·김태원·
 황영철·손범규·김성태·안상수·황우여·
 김세연·권영진·김용태·김영우·이정선 의원
 발의)

4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9. 4. 8 이명수·심대평·고승덕·임영호·
 박상돈·김용구·이용희·이윤석·신성범·
 김창수 의원 발의)

4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청원 제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9. 4. 8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
회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강철규 외 3
인으로부터 이석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면질문서 제출

다문화가정자녀 전수조사 진행상황에 관한 질문서

(2009. 4. 8 원희목 의원 제출)